

누가 ,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일 시 : 2011. 12. 20(화)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보건복지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 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4
2. 인 사 말.....	5
3. 축 사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7
김원길 前)보건복지부장관/ 現)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8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9
이해봉 국회의원.....	10
4. 주제발표 : 강 철 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11
5. 토 론 자 :	
1)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	41
2)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7
3)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55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61
5) 임혜성 나눔정책팀장 (보건복지부).....	79
6. 부 록 : 본연구회 연혁(구성원) 및 관련 언론 기사.....	85

프로그램

1부.....사 회: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4) 참석자 소개..... 사회자
- 5)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前)보건복지부장관/ 現)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이해봉 국회의원

2부.....사 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1) 주제발표 : 강 철 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누가 ,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2) 토론자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 2)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3) 곽대석 국장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
-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5) 임혜성 나눔정책팀장 (보건복지부)

- 3) 시민 패널 및 참관자 질의/응답

- 4) 마무리 발언 : 강 철 희 교수

인 사 말

안녕하세요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추운 날씨와 연말이라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과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오신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감사를 드립니다.

열흘 후면 2011년이 저물고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띠 해 임진년 2012년이 밝아 오겠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 해를 되돌아보니 세월이 여삼추와 같았고 지내고 보니 별 것 아닌 일에도 그렇게 아등바등,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며 살아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저 뿐만이 아니겠지요.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한편 건강하게 가족, 주위의 지인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보내는 사소한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선진사회복지연구회>설립 2주년 기념을 겸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여러 가지 소회가 떠오릅니다.

올 한 해 2.17일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6월 14일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9월 27일 '한국 복지 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등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시기적절한 토론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발표 해 주신 이삼식 박사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님, 고병선 KDI 연구본부장님,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강철희 교수님, 그리고 각 회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회가 저명인사나 명망가분들 위주가 아닌 평범하면서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인 정말 순수한 풀뿌리 시민단체이지만 나름대로 꾸준히 토론회를 통해 정책제안도 하고 봉사 등을 하는 동안 이제 제법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매번 토론회 때마다 주제발표, 토론자로 참여 해주시는 존경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도와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고 스스로 잘 해 왔다고 자부 해 온 일도 있었는데 올해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연구에 매진하여 열심히 제대로 잘 한다는 평을 듣는 연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연말, 연초가 되면 평소보다 더 주위에 형편이 어려운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36.4%가 기부에 참여한 바 있으며 19.8%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부하는 이유 43.3%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고 답변하였는데 나눔을 실천하는 보이지 않은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8.3%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말처럼 물질, 재능, 노동 등 자기가 가진 탈란트대로 이웃과 사랑을 더 나누고 실천하기 위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강철희 교수님, 토론자로 함께 하신 김현옥 회장님, 안명옥 이사장님, 강학봉 본부장님, 엄혜성 과장님, 곽대석 사무국장님, 시민패널로 신청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 시민패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0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본 연구회 고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겸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강철희 연세대 교수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서로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원시시대 이래 인류사회에서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이어져 왔고, 중세 이후의 자선사업, 박애사업, 사회사업 등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대국가의 사회복지도 따지고 보면 이와 같은 나눔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공동체사회를 기초로 하는 동양문화의 전통에 따라 품앗이, 두레, 줌도리, 거상 김만덕 등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오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한해, 수해, 태풍 등 재난을 당했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국민들의 의연금 모금운동을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성금 모금운동도 매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미국의 40% 수준이며, 등록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중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나눔은 대부분 법인명의의 사회공헌용으로 출연하므로 나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양극화 현상과 산업화 이후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등으로 사회복지의 수요는 더욱더 크게,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복지국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더 커져가는 형국입니다.

국가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눔의 본질적 성격상 국가의 사회복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의 본질은 인간사랑이고, 인간사랑에 바탕을 둔 나눔공동체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인적, 물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N(나눔) 마크를 부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면 매출액의 일부분이 사회에 기부되는 행복나눔 N 캠페인, 사회지도층이 멘토링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휴먼네트워크사업,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코리아한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더욱 많은 과일러트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나눔문화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원 길 前보건복지부 장관/ 現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우리 사회는 어두운 곳에서 소외되고 상처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극심한 경쟁 체제를 겪으면서 수많은 낙오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었는데 비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소득의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급진전에 따라 수많은 어려운 노인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나이가 들면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아 볼 때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해 볼만 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기부문화에 관한 알찬 토론회를 개최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이정숙 차장이 이끄시는 <선진 사회복지연구회>에 존경을 드립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창립 2주년 기부문화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축 사

오 영 숙 前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년을 겸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연수로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동안 “미래 한국복지건설을 위한 신 구상”,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과 지역 복지발전의 과제”, “한국적 사회 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성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고령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저출산대책 변화의 함의와 항우과 제”, “배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등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애써 온 이정숙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3조원에 이르는 정치권의 복지예산 증액을 수용하면 목표로 했던 균형재정은 불가능 하며 내년에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짤 때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 라고 말 한 것 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복지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를 하는가? 나눔의 주체 선호에 대한 이해’ 라는 주제 발표를 통 해 좋은 해답과 더 나아가 복지의 문제는 우리들의 관심사인 “나눔과 자원봉사” 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우리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참여하는데서 복지문화가 발전 되고 ‘대한민국’ 을 선진 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복지예산에 총 지출이 28% 라고 하는데 GDP를 대비해서 볼 때 9%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만 국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여 하여 기부와 봉사의 문화가 지금 까지 해 온 것보다 더 발전이 된다면 사회가 안정이 되어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 에 비해 0.8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아동복지, 장애인, 노인, 빈곤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의 복지를 위한 기부를 함으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과 자아실현과 동시에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합이 가능한 바,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정기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의 비율은 점점 증가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며 기독교나 천주교 등의 종교단체들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비율이 매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반해 일반 개인들은 비교적 낮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속적인 참여와 기부도 다르며 연령에 따라서도 기부문화와 참여도가 다른 것에 대한 연구는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과 여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의 이상적인 봉사의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은 어떻게 나눔의 생활을 하며 개인의 가치적 측면에서 어디를 참여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문화 발전이 무엇이며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대안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창립 2주년을 맞는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더 발전을 약속드리며 이 강연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 를 드립니다.

축 사

이 해 봉 국회의원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맞이하는 12월에 개최되는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신 이정숙 회장님과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으면서 부존자원이 없는 격심한 경쟁사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그 충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서서히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간의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계층간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별 갈등, 남녀간 갈등, 노사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였던 슈바이처 박사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마음이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이타심입니다. 나눔은 이타심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베른대학 연구팀은 동물들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쥐에게 도움을 받은 쥐가 또 다른 쥐를 도와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토론의 장이 우리사회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초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 제 발 표

누가 ,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 철 희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누가 어디에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목 차

I. 기부	1. 기부 현황 및 총 규모 2. 누가 어디에 기부하는가?
II. 자원봉사	1. 자원봉사 현황 및 총 규모 2. 누가 어디에 자원봉사 하는가?
III. 향후 한국의 나눔 문화 발전방향	

I -1. 총 기부규모 및 현황

기부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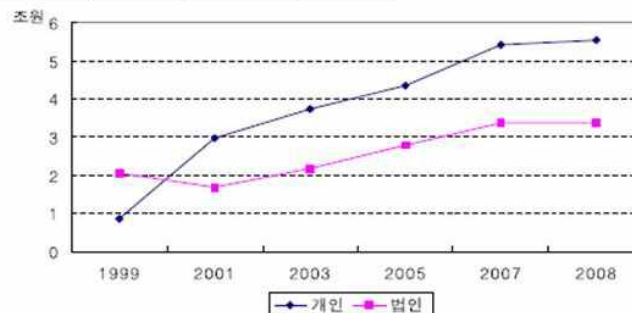
➤ 2008년 총 기부규모 : 8.91조원(국세청)

- 개인 기부(종교기부 포함): 416만명에 의한 5.5조원 규모로 증가추세
- 기업 기부: 3.379조원

(단위: 조원, %)

구분	1999	2001	2003	2005	2007	2008
기부총계	2.9	4.67	5.9	7.13	8.67	8.91
개인기부금	0.85	2.98	3.74	4.34	5.35	5.53
법인기부금	2.05	1.69	2.16	2.79	3.32	3.38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추계 방식에 따른 기부 규모

-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Giving Korea) 분석 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금 규모, **2009년 총 17조 4,940억원(GDP의 1.65%)**으로 추계 (보고하지 않는 기부금을 고려할 때 그 규모는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항목		국세청	Giving Index
조사시기		2008	2009
대상인원		416만명	약 3870만(19세 이상 인구)
기부금 산출 방법		세금공제목적 보고내용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액 보고
기부 총규모	개인 및 기업 기부금 포함	8조9,100억	-
	개인기부금(Secular & Religious Giving)	5조5,500억(개인기부)	17조4,940억
	자선기부(Secular Giving)		6조1,798억
	종교기부(Religious Giving)		11조3,142억
	기업기부금	3조3,790억	-
GDP대비 기부금 규모	개인기부 및 기업 기부금 포함	0.80%	-
	GDP 대비 개인기부금 비율	0.54%	1.65%
	GDP 대비 자선기부 비율		0.58%
	GDP 대비 종교기부 비율		1.06%

기부 규모 및 구성의 비교 (미국 vs.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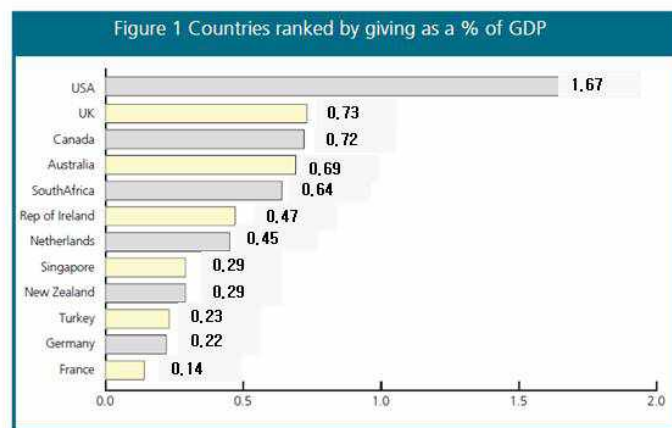
- **한국의 GDP 대비 총 기부금 규모는 0.8%** (국세청, 2008)
 - 미국은 2008년 GDP 대비 기부총액은 2.2%



- 구성에서 미국은 개인기부: 기업기부 = 95 : 5
한국은 개인기부: 기업기부 = 60 : 40

개인이기부 규모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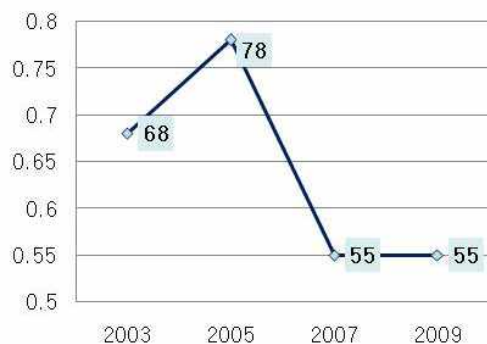
- **한국의 GDP대비 개인기부총량의 비중은 0.54%(국세청, 2008)**
 - 미국은 1.67%, 영국은 0.73%, 캐나다 0.72%, 호주 0.69%
 - 전체 비교대상국 평균은 0.5%, 한국은 평균치에 근접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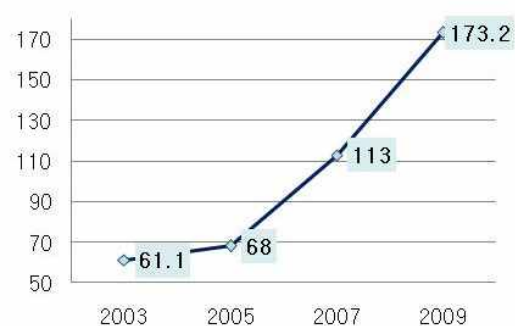
Sources: World Bank WDI 2005: for details of country surveys see Appendix B

개인이기부 참여현황

- 기부참여율은 경제적 상황으로 감소 및 정체의 속성을 갖는데, 현재는 55% 수준으로 **2명 중 1명 꼴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7만원수준임.** 이는 정기적 기부 및 기부규모에서의 증가로 인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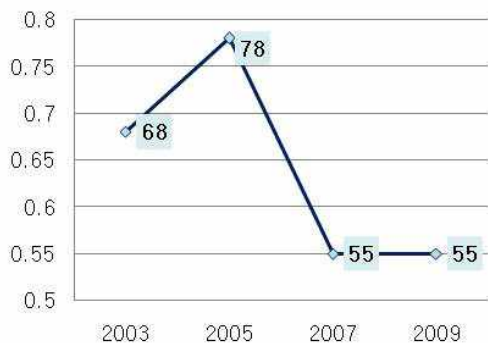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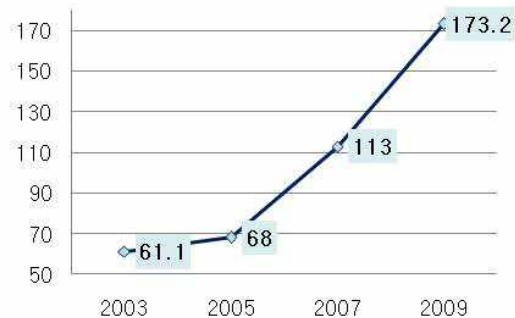
한국인의 평균 기부금액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개인기부 참여현황

- > 기부참여율은 경제적 상황으로 감소 및 정체의 속성을 갖는데,
 현재는 55% 수준으로 **2명 중 1명 꼴로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평균 기부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2009년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7만원수준임.** 이는 정기적 기부 및 기부규모에서의 증가로 인한 것



한국인의 기부 참여율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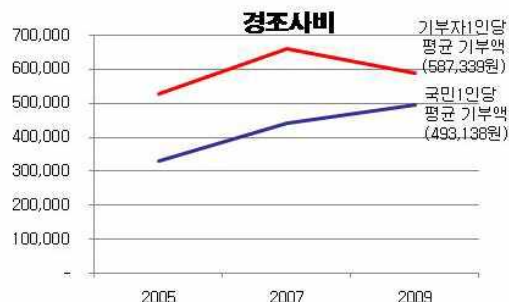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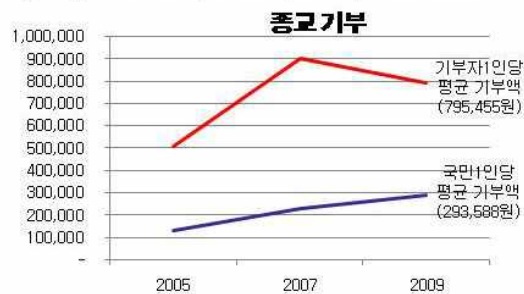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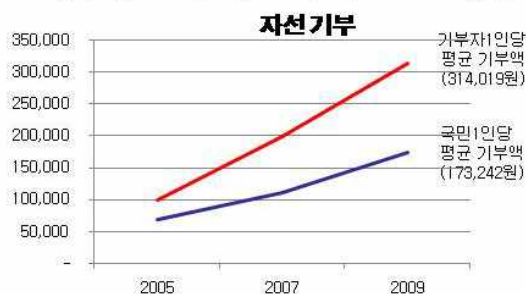
한국인의 평균 기부금액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개인기부의 구성 별 평균 기부금 규모 및 추이

- > 규모상 세 가지 형태 나뉘는 모두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

– 국민 1인당 자선기부: 약 17만원 / 종교기부: 약 29만원/ 경조사비: 약 49만원

기부자 1인당 자선기부 약 31.4만원/ 종교기부: 약 79.5만원/ 경조사비: 약 58.7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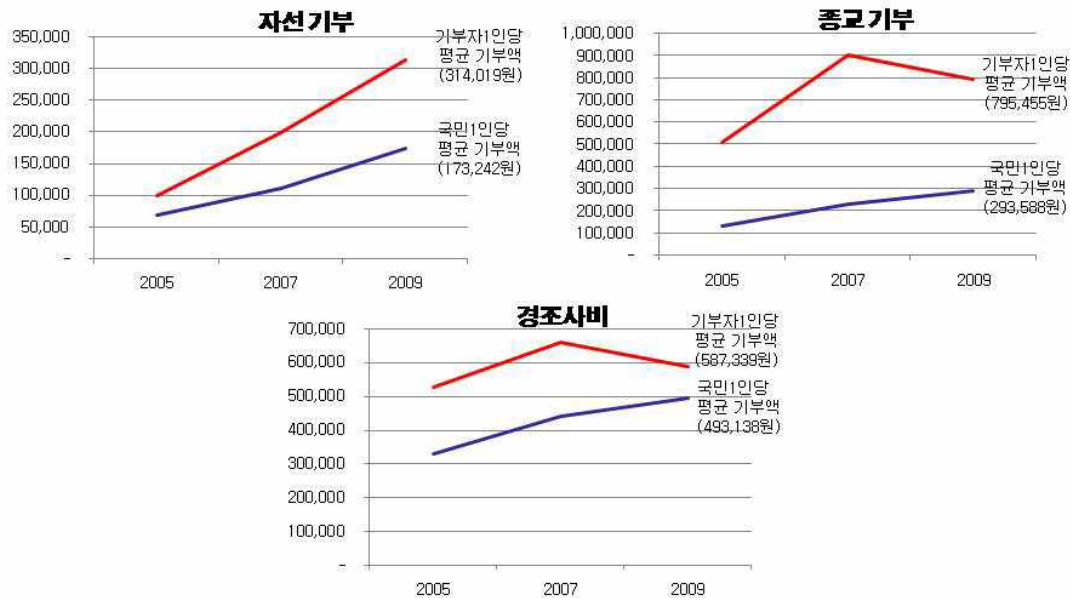


개인기부의 구성 별 평균 기부금 규모 및 추이

▶ 규모상 세 가지 형태 나눔 모두에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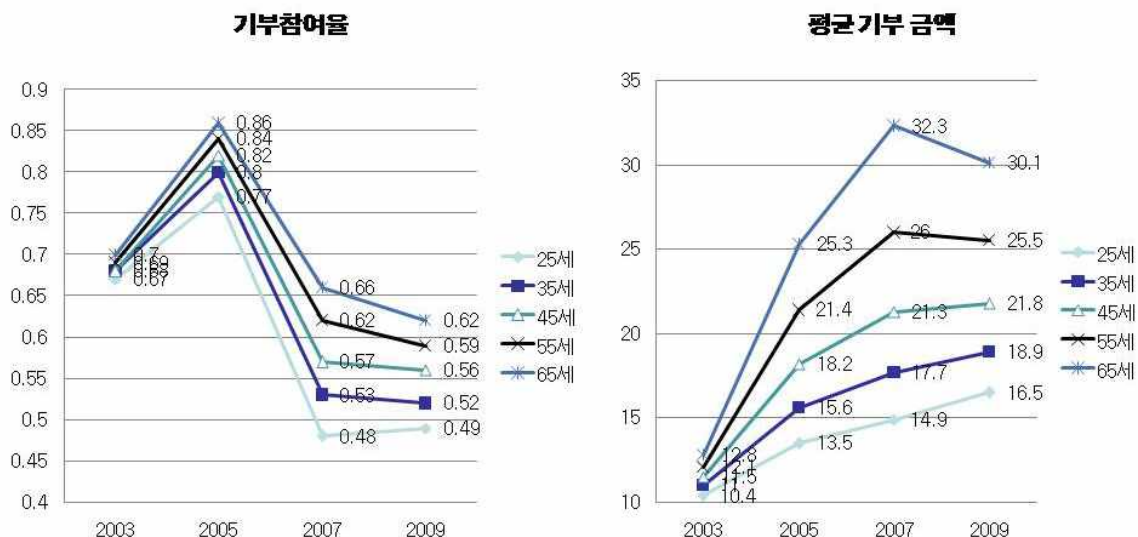
– 국민 1인당 자선기부: 약 17만원 / 종교기부: 약 29만원/ 경조사비: 약 49만원

기부자 1인당 자선기부 약 31.4만원/ 종교기부: 약 79.5만원/ 경조사비: 약 58.7만원



누가 기부하는가? - 연령대 별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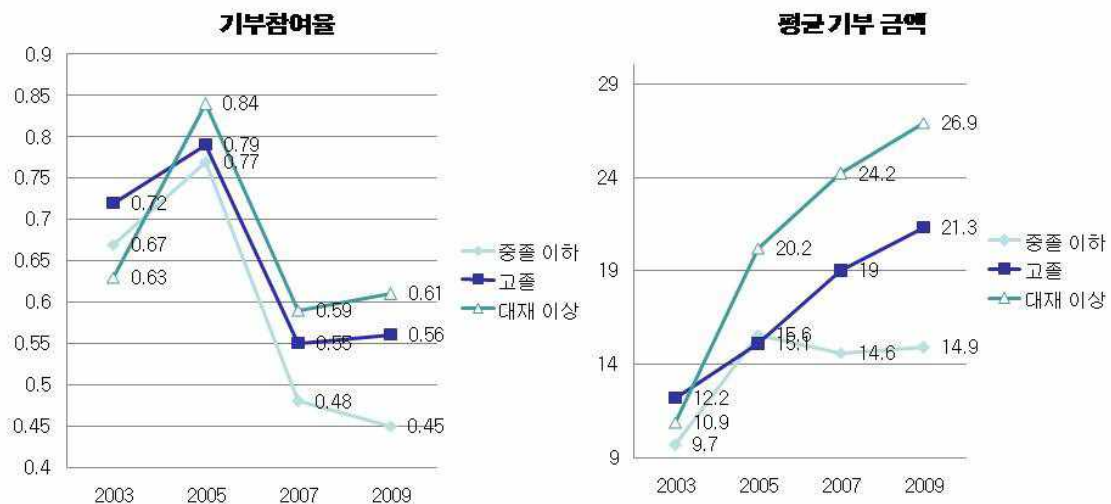
▶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부참여율 및 평균 기부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누가 기부하는가? - 교육수준 별 속성

➤ 학력이 높을 수록 기부참여율이 높음 (단, 2003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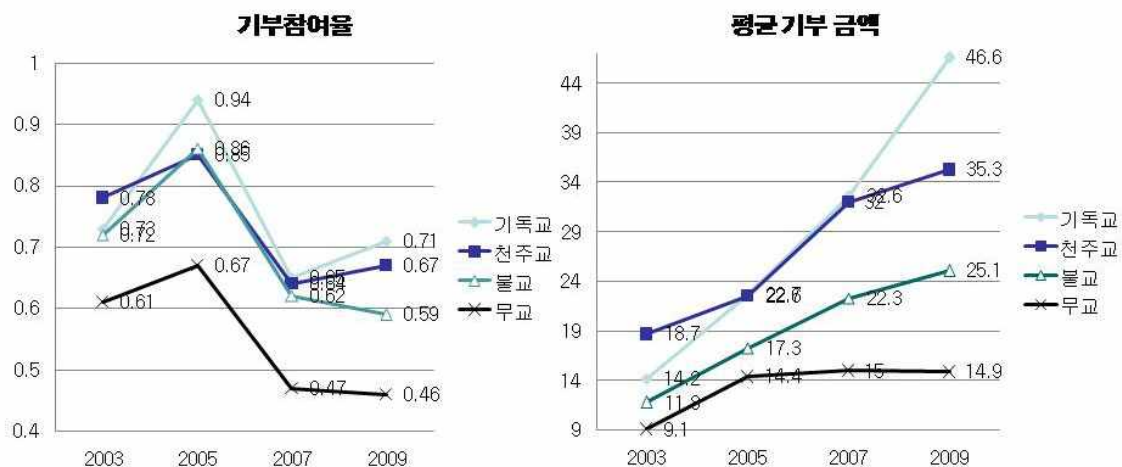
➤ 학력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 또한 높음 (단, 2003년, 2005년 제외)



누가 기부하는가? - 종교적 배경 별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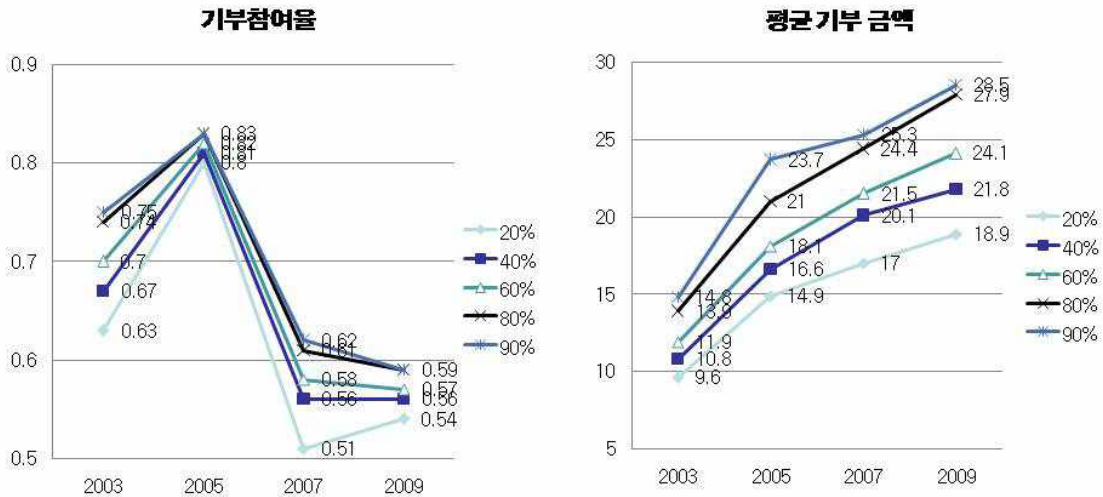
➤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무교에 비해 기부참여가 높음

➤ 기부금액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단, 2003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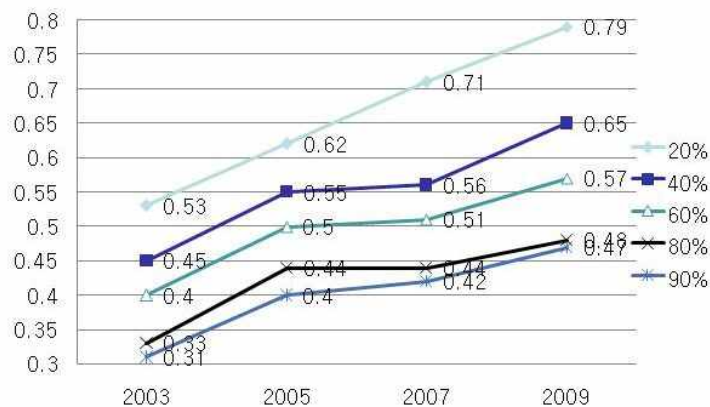
누가 기부하는가? - 소득 별 속성

➤ **소득이 높을 수록 기부참여율 및 평균기부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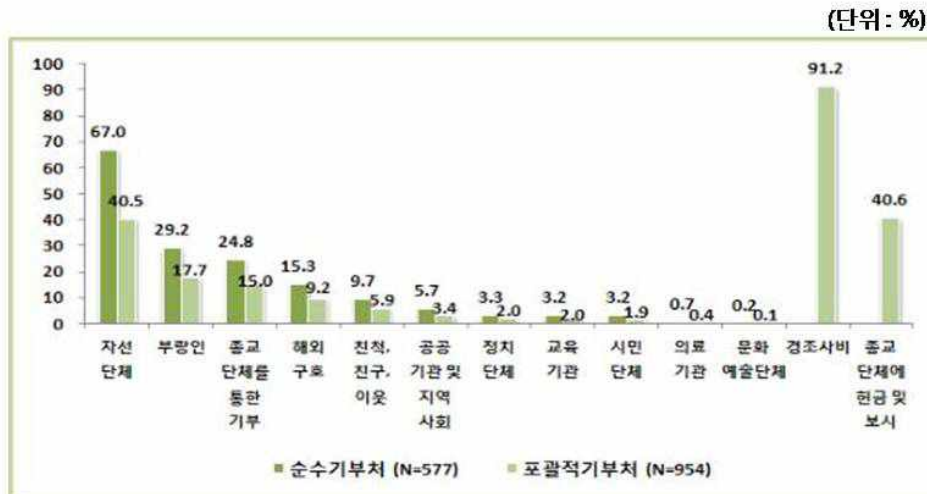
누가 기부하는가? - 자선기부노력의 소득계층별 속성

-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기부 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음**
특히 소득수준 하위 90%(상위 10%)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음
-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의 경우 참여도와 규모는 낮은데 비해, 기부 노력의 수준은 높게 나타남. 소득수준 하위 20%대에 있는 시민의 기부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어디에 기부하는가? - 기부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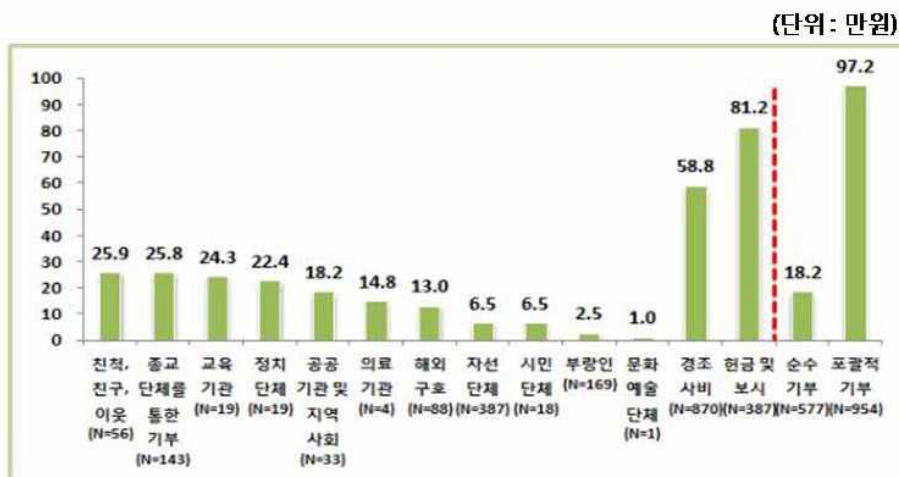
- ▶ 참여자 중 **자선단체에의 기부가 가장 높은 67%를 차지**
- ▶ 부랑인을 돕는 경우 약 29%,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약 25%, 해외구호 약 15%
- ▶ 정치, 교육, 시민단체, 의료기관, 문화예술의 비중은 5%이하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기부처별 평균 기부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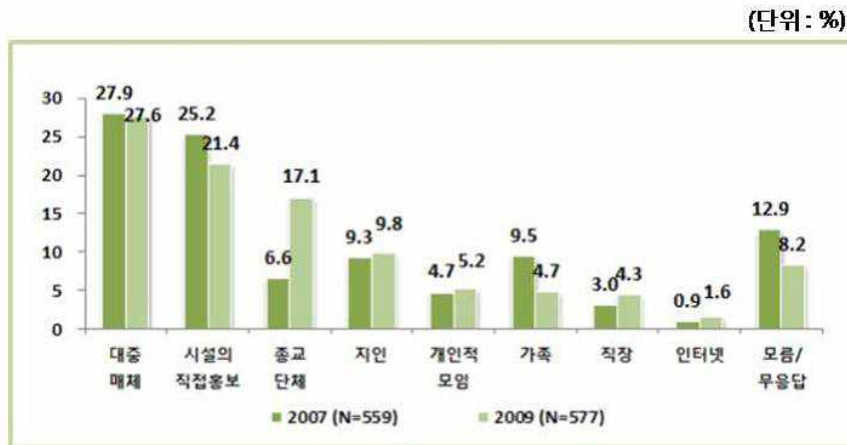
- ▶ 친척, 친구 이웃에 대한 기부와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가 약 26만원으로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포괄적기부처에 속하는 종교적 기부 및 경조사비를 제외)
- ▶ 정치단체,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은 참여율은 낮지만 평균 기부금액은 자선단체에 비해 높음. 반면, 참여율 가장 높았던 자선단체는 평균 6만5천원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기부처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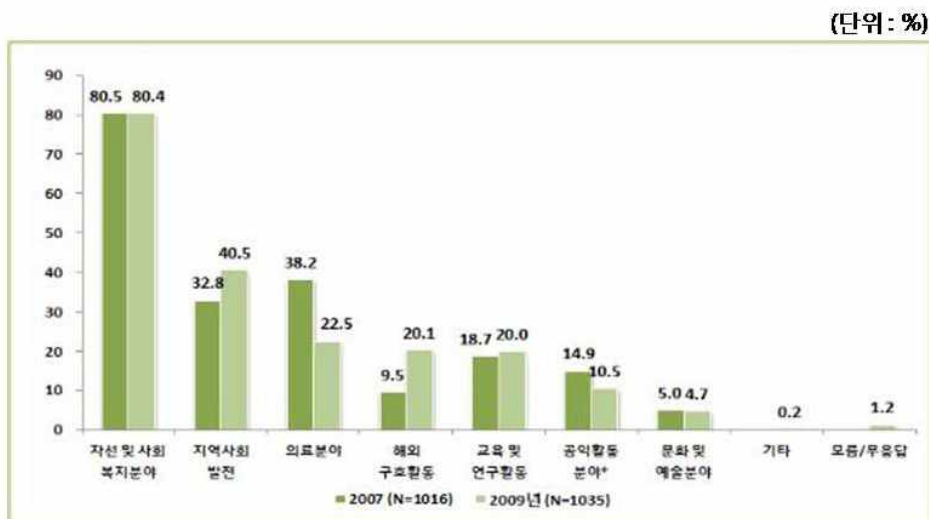
- 기부의 대상에 대한 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의 기여가 돋보이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시설의 직접 홍보에 의해(21.4%), 종교단체를 통해(17.1%), 지인의 소개를 통해(9.8%) 기부처를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향후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

- 향후 기부의 사용희망 분야에 **자선 및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임**
- 2007년과 비교해서 지역사회발전과 해외구호활동에 향후 더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반면, 의료분야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출처: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향후 기부금 사용 희망 대상

- 기부의 대상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구는 **아동**이고, 그 다음이 노인과 장애인 및 빈곤가구임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동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선호됨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향후 기부금 사용 희망 단위

- 대상이 누구든 어디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선호되는 단위는 **바로 나의 거주지역사회**임
- 반면, 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부유층은 어디에 기부하고, 기부하기를 원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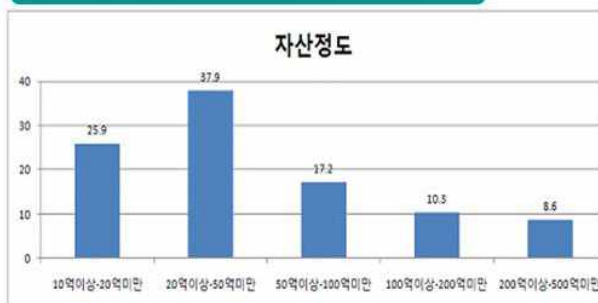


부유층의 기부관련 연구(강철희, 2009)

< 분석방법 >

- 대상 - 유동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부유층 68명
- 부유층 기부행동 관련 기술적 분석 (descriptive analysis)
- WM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 8명을 4집단으로 나눠
- 기부를 실천하는 부유층대상 심층인터뷰
: 자산50억원~1000억원 보유 7인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산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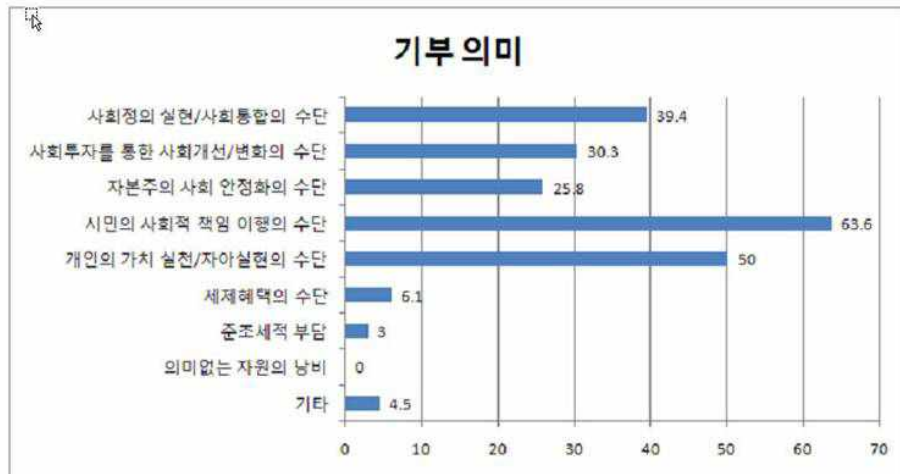




부유층의 기부에 대한 인식 및 동정적 태도 -기부의미

부유층에게 기부란 어떤 의미인가?

- : ‘**사회적 책임 이행**’ 을 위해 기부한다는 것이 **63.6%**로 가장 높음. 그 다음으로는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50%)**’,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39.4%)**’ 이 높은 동기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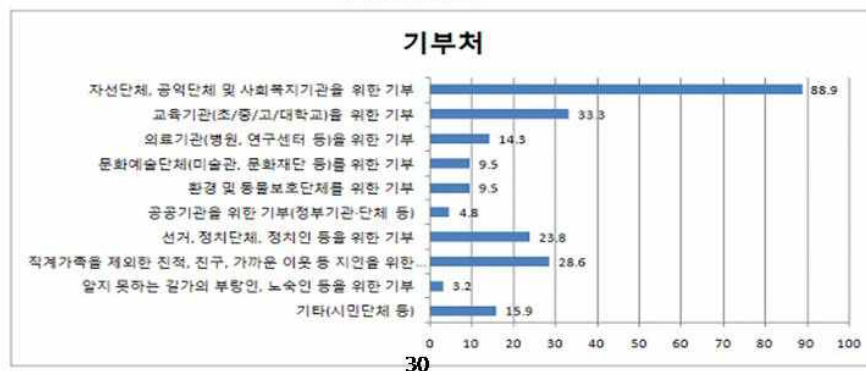
부유층의 기부행동



➤ 2009년 이전 3년 이내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경험 있음

➤ 가장 보편적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88.9%),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관(33.3%), 천적 및 이웃(28.6%), 정치단체(23.8%)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남





부유층은 얼마나 기부하는가?

- 이들은 3년 평균 약 1억 1,500만원 정도를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극단값을 제외하면 약 2,000만원 가량을 연평균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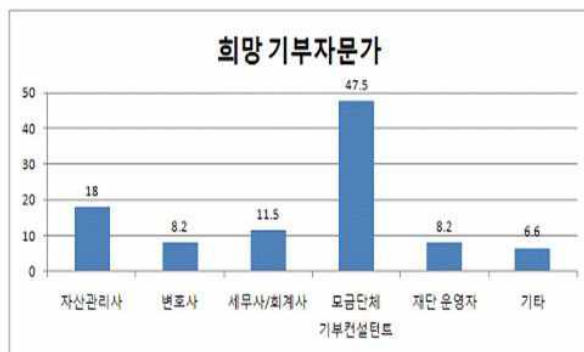
[표 12] 조사응답자의 순수 자선적 기부의 규모

	2006	2007	2008	3년 평균
평 균	1억 578만원 (1,278만원)*	2,010만원 (2,044만원)*	2억 1,836만원 (2,730만원)*	1억 1,475만원 (2,017만원)*
표준편차	71466.54	4433.11	146866.56	72717.17
중앙값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최빈값	100만원	0만원	1,000만원	100만원
최소값	0만원	0만원	0만원	0만원
최대값	55억원	3억원	113억원	56억 13만원
사분위수	25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50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75	2,000만원	2,000만원	2,566만원

주(*): 각 년도(2006, 2008년)의 극단값을 제외한 평균 기부규모



부유층의 향후 기부계획 및 기부 관련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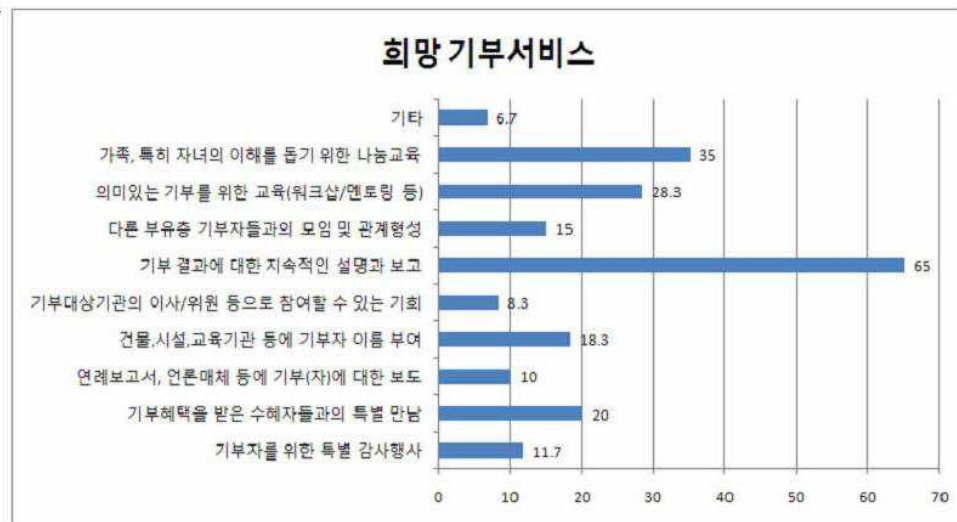


- 향후 기부의향은 98.5%로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부유층이
향후 기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유산기부 또한 10명중
6명 정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희망기부자문 분야는 모금단체
기부컨설턴트인 것으로 보고됨



부유층의 희망 기부 서비스

- 부유층이 바라는 희망 기부서비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기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65%)’ 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가족 및 자녀를 위한 나눔교육(35%)’, ‘의미있는 기부를 위한 교육(28.3%)’ 순으로 나타남



최근 기부 Target에 관한 연구들

- 최근, 기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기부를 하는 세부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이러한 노력이 보다 발전되어야 함

◆ 사회복지영역 vs. 비사회복지영역 기부 (강철희 외, 2011)

: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사회복지영역 신뢰, 비사회복지영역 신뢰)에 따라 기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비사회복지영역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은 비사회복지 영역의 기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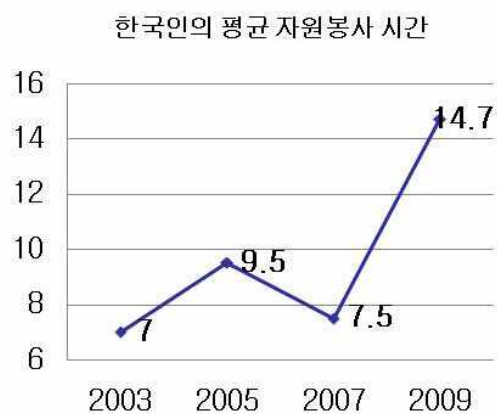
◆ 국내기부 vs. 해외기부 (강철희 외, 2011)

: 주부와 학생들이 농림어업 및 자영업에 비해 해외기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정부/언론/기업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록 해외기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부동기에 있어서 국내에만 기부하는 경우는 동정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해외기부는 주변의 주요 인물의 요청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Ⅱ-1. 자원봉사현황 및 총 규모

☐ 자원봉사 참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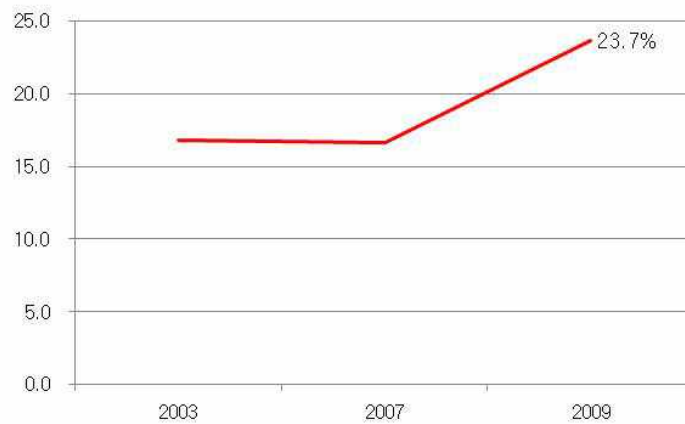
-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9년 24%로 참여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현상을 보임
- 그러나, 자원봉사 평균 참여시간은 2007년 대비 2009년 약 2배 가량 증가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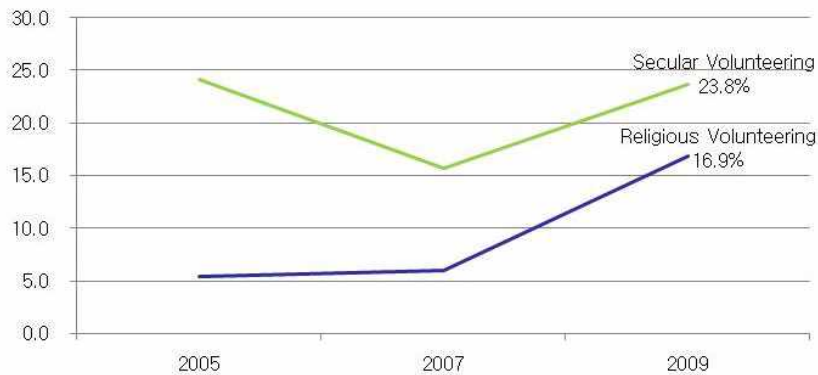
➤ 자원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정기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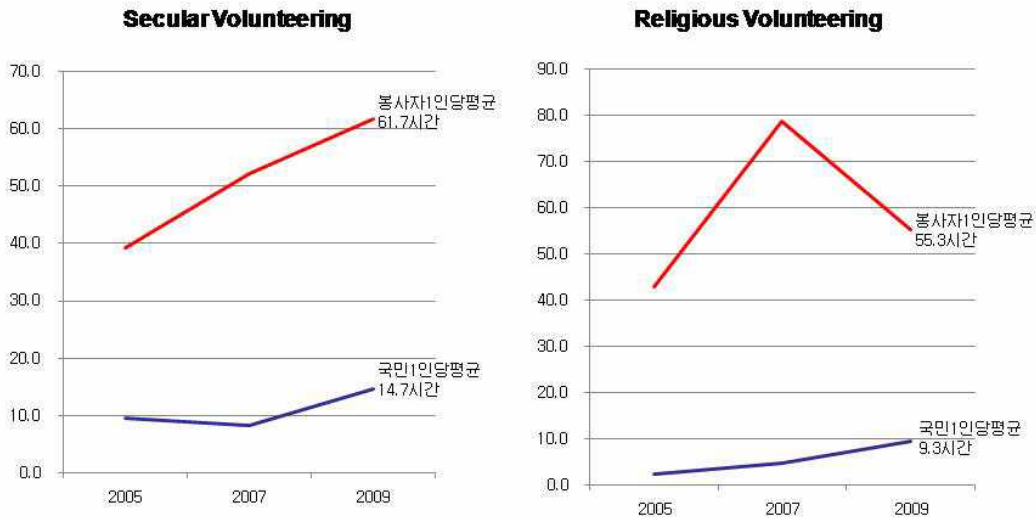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참여율

- 일반자원봉사(Secular Volunteering) > 종교자원봉사(Religious Volunteering)
- 종교자원봉사(Religious Volunteering)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자원봉사 유형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 > 종교자원봉사에 비교해서 일반자원봉사의 시간이 자원봉사자 1인당 시간과 국민 1인당 시간 모두에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자원봉사 총 규모 추계 및 예측: 금전적 가치로의 환산

> 일반자원봉사(Secular Volunteering) 시간 총규모

: 기준치를 반영했을 때 2009년에 5억4천7백만시간;

이는 2009년도 최저임금인 4,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2조1천8백80억원의 규모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가중	544,248,792	550,204,079	556,387,842	562,649,087	568,899,060	574,999,487	580,945,664
가중	547,022,398	553,008,034	559,223,310	565,516,464	571,798,289	577,929,804	583,906,285

> 종교자원봉사(Religious Volunteering) 시간 총규모

: 기준치를 반영했을 때 2009년에 3억3천9백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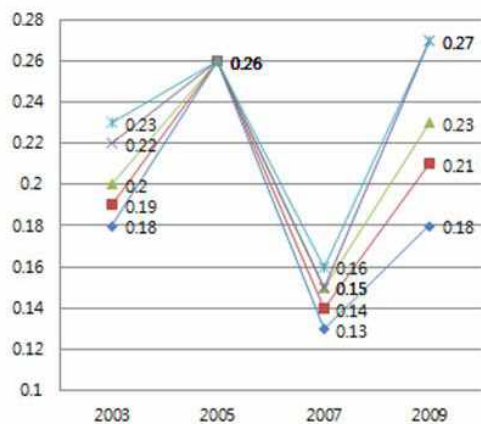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가중	334,011,717	337,666,545	341,461,591	345,304,189	349,139,869	352,883,771	356,533,008
가중	338,836,468	342,544,089	346,393,594	350,292,057	354,183,144	357,981,126	361,683,075

표-2. 누가 어디에 자원봉사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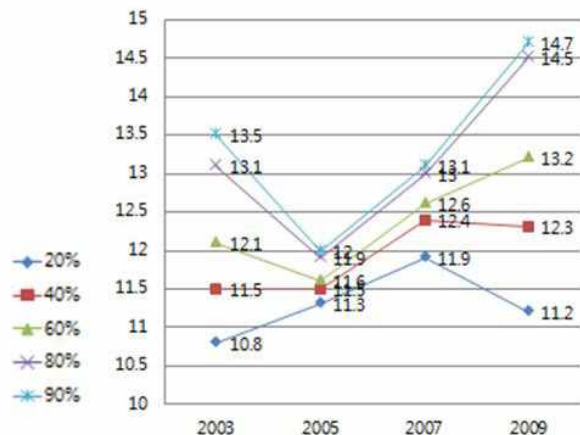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 하는가? – 소득별 속성

- **자원봉사 참여율**에 있어서, 소득수준 하위 20%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고, 하위 90%(상위 10%)의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소득수준 하위 20%의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가장 짧고, 하위 90%(상위 10%)의 자원봉사 참여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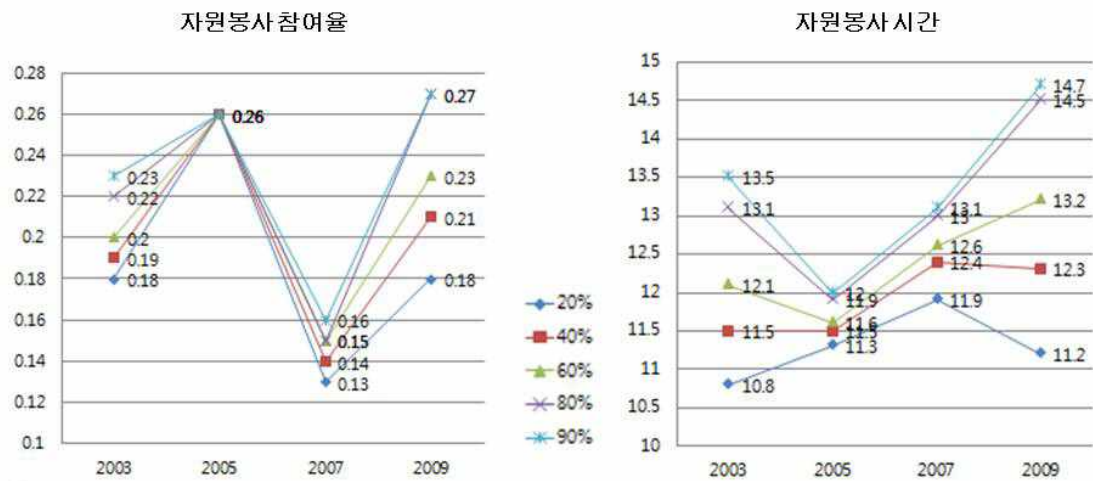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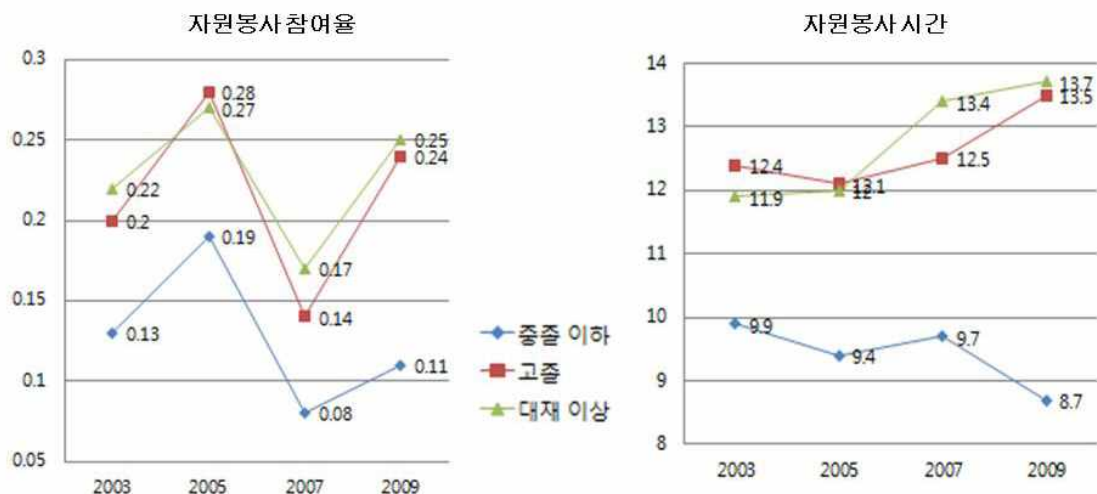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 하는가? – 소득별 속성

- **자원봉사 참여율**에 있어서, 소득수준 하위 20%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가장 낮고, 하위 90%(상위 10%)의 자원봉사 참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소득수준 하위 20%의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가장 짧고, 하위 90%(상위 10%)의 자원봉사 참여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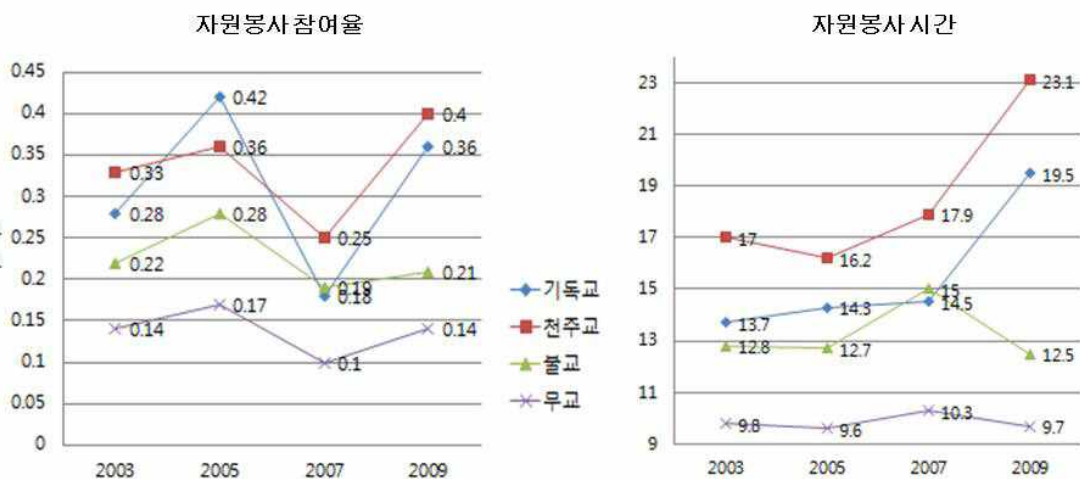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 하는가? – 교육수준별 속성

- **자원봉사 참여율**은 교육수준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2005년을 제외하고는 대재 이상, 고졸, 중졸의 순으로 일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자원봉사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참여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중졸의 경우, 일관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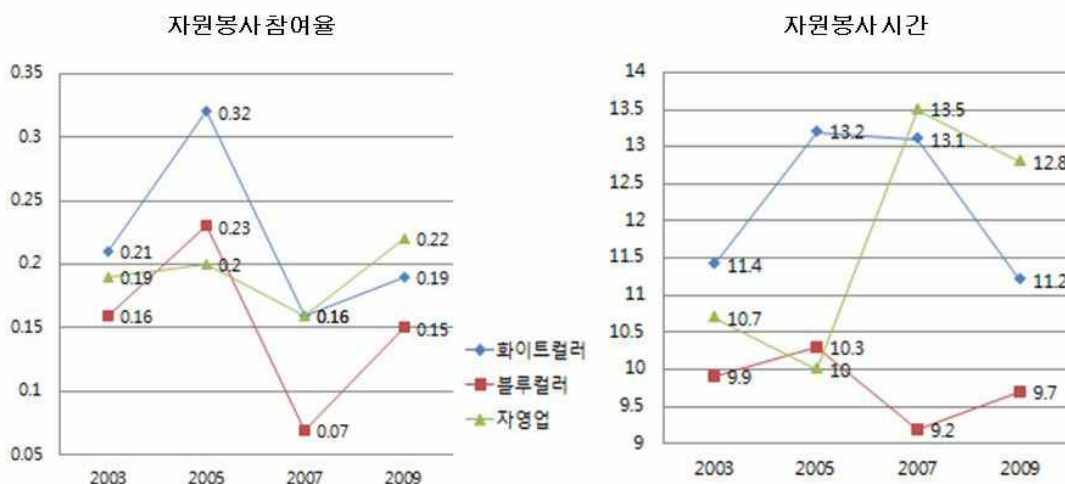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 하는가? – 종교별 속성

- ▶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종교와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천주교를 가진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가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원봉사 시간**의 경우에도 종교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천주교를 가진 시민의 자원봉사 시간이 일관적으로 높고, 종교가 없는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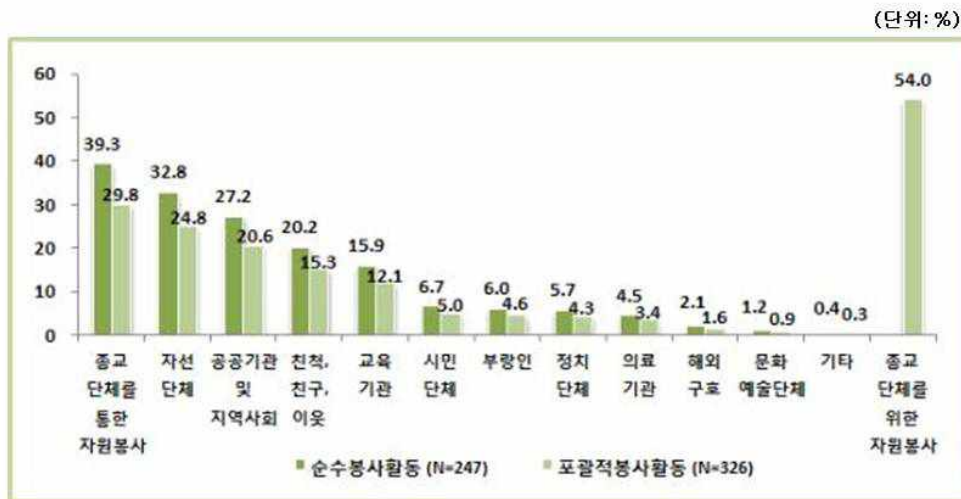
누가 자원봉사 하는가? – 직업군별 속성

- ▶ **자원봉사 참여율**의 경우, 자영업과 화이트컬러의 경우 봉사 참여가 높고, 블루컬러의 경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원봉사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2005년만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자영업과 화이트컬러의 자원봉사 시간이 일관적으로 높고, 블루컬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 활동처

- 자원봉사 활동처로는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Informal 자원봉사의 비중도 주목할만한 규모임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자원봉사 활동처에 따른 자원봉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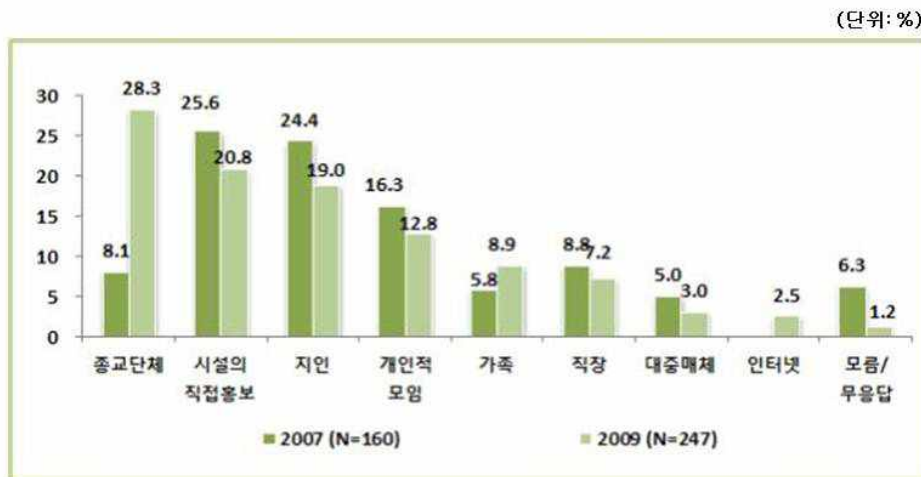
- 자원봉사 활동의 평균시간은 일반자원봉사의 경우 **연간 61.9시간**으로 나타남
- 참여자 중 일부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전체 평균이 높음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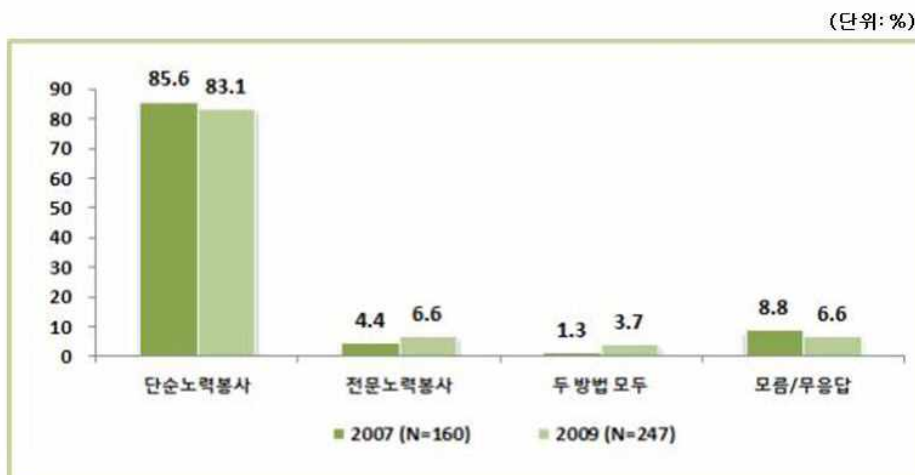
- 자원봉사의 활동처 인식에서 세 경로가 주목됨: **종교단체, 시설의 직접홍보, 지인**
- 특히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뜨고 있는 종교단체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목됨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자원봉사 활동 방법

-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방법이 더 다각적이어야 함을 제시
- 단순노력봉사가 여전히 83%이상의 수준임



출처: 아름다운 재단 Giving Korea 2010

Ⅲ. 한국의 나눔 문화 발전 방향

개인의 자선적 기부와 관련된 제한성

- 자선적 기부의 참여확대의 문제: 50-60%대의 참여
- 자선적 기부의 정기성 확대의 문제: 기부자 4명 중 1명 정도의 정기성
그리고 전체 시민 중 13.3% 정도에서만 실행되고 있는 정기성
- 부유층의 기부노력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문제:
 -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이고 유증 7%의 규모로, 실제로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임
 - 이러한 개인 기부 중 상위 1%에서 상위 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에서 50% 이상의 수준(Schervish, 2003)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인 상황임
 -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음

종교기부

- 나눔의 또 다른 핵심주체는 종교기관임. 그러나 종교기관의 나눔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상황
- 이런 상황이기에 개인의 종교기부참여 및 규모만을 참고해서 간접적 추계. 종교기부 참여는 36.9%로 자선기부(55.2%) 보다 낮지만, 국민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약 29.5만원으로 자선기부(17.3만원)보다 12.2만원 높은 수준. 종교적 기부자의 1인당 평균은 79.5만원의 수준
- 기부 총 규모를 비교할 때도 Giving Korea 추계자료에 의하면, 개인기부금(자선+종교) 전체 17.5조원 중 종교기부는 11.3조원으로 대략적으로 전체 개인기부의 65%를 차지. 이는 GDP 대비 1.06% 규모
- 여기서 핵심적 관심은 “이러한 규모의 개인 종교기부 중 어느 정도가 사회를 위한 나눔의 몫으로 return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임

개인의 자선기부 관련 과제

-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 부유층 나눔 모형의 개발과 촉진
 -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하는 상황임
 -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것임
- 유산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Planned Giving)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 부유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꾸짖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통해서 모범이 되고자 하는 의향을 촉진하는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함
 - 특히, 재단설립 및 유증, charitable trust, donor-advised fund, charitable annuities 등의 계획기부를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
- 나눔의 생활화: 참여,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 50% 대의 참여 그리고 13.3%의 정기적 나눔실천의 수준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이를 위해서 정부, 방송과 언론, 기업, 노조, 다양한 NPOs, 시민단체 등의 주도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생산활동 관련 dependence ratio가 4대1, 그리고 곧 2대1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나눔의 가치와 규범의 구축은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정규교육에서 나눔교육을 제도화하면서, 가정, 종교기관, 학교 등의 모든 구성체에서의 나눔가치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

개인의 종교기부 관련 종교기관 나눔의 과제

➤ 개인의 종교적 기부(religious giving) 그 자체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종교적 기부를 받는 종교기관에 의한 사회적 나눔의 활동 상황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류 역사에서 charity는 종교의 몫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리매김하였고 그렇게 발전해 왔음. 따라서 개인의 종교기부에 기반한 종교기관의 나눔의 과제는 사회적 의제의 영역에 속할 수 있음

➤ 종교기관의 선교와 나눔의 균형: 종교기관의 나눔노력 확대 필요성

- 개인의 기부 중 65%라는 절대적 규모가 religious giving이라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여에 기반하는 종교기관의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수준 제고 노력이 필요
- 나눔의 3대 주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종교기관의 나눔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규모 및 활동 내용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종교기관 나눔 모형의 구축 노력이 필요
- 종교기관의 나눔 촉진 및 확대를 위해 종교기관과 정부의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faith-based community initiative 등에 대한 고찰 및 벤치마킹도 필요할 수 있음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Philanthropic Market)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

➤ 다양한 주체에 의한 나눔 실천을 촉진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의 노력

- 정부 및 민간단체 그리고 은행 및 증권사와 투자회사 등의 영리기관이 지속적으로 각 조직이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나눔주체(시민 개인, 기업, 종교기관 등)의 나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지원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새로운 나눔 상품 및 나눔 방법의 개발과 활성화

- 부유층 및 중산층의 잠재된 기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부 상품 및 새로운 나눔의 방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계획기부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계획기부를 통해 부유층 및 중산층이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나눔참여 및 나눔노력을 제고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Philanthropic Market)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

➤ 세금 혜택 등과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의 강화 노력

- 현금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산 기부에 대해서 세금과 관련된 기부장벽 등이 존재하지 않게 제도적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
- 계획기부 도입과 관련해서 도입의 가장 장벽이 될 수 있는 법체계 및 세제부분에서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다양한 주체에 의한 나눔 활동 관련 통계의 지속적 생산

- 현재의 통계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객관적인 새로운 통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보다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 제공 및 자원봉사의 정기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자원봉사가 지니는 가치는 금전적 차원을 넘어 사회참여를 통한 기부로의 확장의 토대로도 작용하는 등 그 가치는 기부보다도 더 클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 강화 노력이 필요

토 론 문

곽 대 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상생과 나눔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다. 이러한 이슈는 사회문제가 확대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는 시기적절하다고 보며, 주제와 발제내용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발제에서 기부금의 현황과 총규모를 인구학적 특성과 개인기부 등 주체별 기부현황과 자원봉사 현황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와 나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가 어디에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가?”에서 우리나라 기부 현황을 살펴보고 나눔문화 발전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공감하면서, 토론은 기업경험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맞추어 몇 가지 추가적인 제안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최근 사회복지의 점차 다양해지는 복지수요와 사회변화에 따라 더 많은 복지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복지자원 확대에는 한계점이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자를 위한 자원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민간의 주체들이 사회복지자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더 나아가 많은 기업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현재보다 다양한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다양한 자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개발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개발, 배분,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부자의 입장에서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더 많은 기부와 나눔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의 복지에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86.4조원이 책정되었고, 2012년에는 9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대비 6.4%가 증액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예산만으로 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당하기 위한 민간복지자원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에산 확대와 민간자원개발의 중요성은 앞으로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

기업 사회공헌 지출 현황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 8,735억 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분야별로 실적을 보면 [표-1]과 같이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2010년에는 총액 751,339백만 원 중에서 51.1%인 384,237백만 원으로 집계되어 기업들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

분 야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복지	38.4	35.3	25.3	45.2	46.6	51.1
의료보건	5.8	0.3	0.3	0.4	0.4	12.3
교육, 학교, 학술	7.2	9.9	10.1	10.5	9.4	4.8

문화예술, 체육	9.8	8.3	9.7	12.8	4.5	13.3
환경보전	7.9	1.8	3.1	1.2	0.6	1.7
응급, 재난	0.2	0.2	0.3	0.1	1.0	0.9
국제구호	0.1	4.4	4.6	5.7	2.6	5.0
농촌지원	-	3.9	3.0	2.3	3.5	4.5
기타	30.5	35.8	43.6	21.7	31.4	6.4

*자료 : 2010 전경련 재인용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내부 저해요인으로 전문성 부족, 사회공헌에 대한 정보부족, 활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로 요약된다.

기업의 나눔과 기부의 방식은 [표-2]와 같이 현금기부, 현물기부, 시설제공, 인재제공, 저금리 융자 등의 다양한 방법과 형태가 있다. 본 토론에서는 현물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현물의 기부는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제품, 재산(동산, 부동산), 장비, 시설의 기부 둘째, 기술 등 무형의 현물로서 서비스 기부 셋째, 가격할인까지가 현물기부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재무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훈련 등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기부하는 것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2]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방식

종 류	주 요 내 용
현금기부	기업 단독 기부(가장 일반적 기부) 종업원과 연대한 기부(matching grant) 학교, 행정, 기관 등 파트너를 이루는 형태의 기부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마케팅형 기부(공익연계 마케팅)
현물기부	자사제품, 타사제품, 부동산, 설비기기, 증권 등 이용한 기부
시설제공	회사 보유시설(운동장, 체육관, 회의실, 별장, 보유시설 등) 개방과 임대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인재제공	학교나 공공시설에 인재파견 종업원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지원(사회봉사 휴가제도) 제 3섹터로 인재파견
시장가격 이하로 융자/투자	학교, 아동시설, 병원, 미술관 등 준 공공기관에 경영지원 저금리 융자, 투자 경영이 어려운 비영리 단체의 재건 원조

현물기부 형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푸드뱅크를 살펴보면, 단일 사회복지서비스로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복지사업 중 하나로 295개의 전국적 조직으로 1개, 광역 16개, 기초 278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국 푸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까지 기탁 누계금액은 3,950억 원이며 식품기부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30,338처이고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민간 기업으로 기탁된 3,950억 원의 기부 중 50% 이상인 약 1,950억 원이 기업의 기부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푸드뱅크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민간사회복지체계로 앞으로 생활제품 등으로 확대가 가능한 발전 잠재력이 큰 영역이다. 이와 같이 기업은 현금과 현물기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영환경의 변화로 더욱 활발한 기부와 나눔 활동이 예상된다.

기업 자원봉사 활동

인적자원 지원형태로는 임직원들이 자원봉사가 대표적인 활동이다. 봉사활동 분야에서도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76%이상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43.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기업의 훈련된 인력을 단순한 봉사보다는 그들의 기능과 기술에 맞는 재능봉사 활동이 가능한 분야에서 더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현금과 현물기부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서 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은 나눔과 기부의 활성화에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기업의 다양한 기부와 나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효과로 연결되어서 생활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디에 기부하고 봉사할 것인가? 기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욕구가 있는 곳에 지속성, 진정성을 갖고서 참여해야 한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글로벌 지역으로 그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배분하는가도 중요하다. 개발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어떠한 절차로 배분할 것인가? 어떻게 소통하면서 배분할 것인가? 에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본다. 정부는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은 상생과 나눔의 사회로 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토 론 문

안 명 옥

(차의과학 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17대 국회의원)

<기적을 꿈꾸는 나누는 공동체>

주제 발표자인 강철희 교수께서 ‘누가 어디에 기부 및 자원봉사를 하는가?—나눔 주제 및 선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셨으나 토론자인 저는 원래 토론회에 초청되었을 때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참 나눔과 기부, 봉사가 무엇이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 제시’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근본적인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나눔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토론자로서 이 토론문에는 아주 작은 부분을 적을 수 있을 뿐이고 자세한 제 생각은 블로그 (안명옥의 무지개나라 : <http://www.amo21.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양의 사회갈등의 구체적 해결책으로서의 나눔공동체와 ‘사랑의 정치’, ‘사랑의 경제’에 대한 논의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는 나눔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두레, 향약, 계, 품앗이 등이 그것입니다. 나눔이란 역사 이래로, 또 서양에서는 크리스찬 정신에 기본하여 발달된 정치철학인 ‘보편적 형제애(universal fraternity 필자 주: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자유, 평등, 보편적 형제애 중의 하나인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형제애가 박애로 번역되어 왔었으므로 혼돈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 박애가 실상은 “보편적 형제애 (universal fraternity)”이다. 아마도 이 번역 부분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형제애에 대한 인식이 종교적인 개념으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형제애는 도처에서 근본적 정치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존 롤스의 정치 개념 핵심은 불평등과 사회 내부의 비대칭적인 면은 사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도움을 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형제애의 실천입니다. 한편 공유경제를 제안한 끼아라 루빅은 한 담화에서 “이 시대는 더욱 더 동등성과, 연대성과, 무엇보다 더욱 더 균등한 재산의 분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은 저절로 움직이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제들만이 형제를 생각할 줄 알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알며, 그들이 지닌 모든 것을 나눔 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 형제애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정말이지, ‘도움과 나눔의 커다란 힘’은 강조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합니다.

또한 나눔은 조건 없이 주는 것, 선물(present)입니다.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거저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신수련(Spiritual Exercise)시에 얻었던 영감, 한 깨달음이 바로 성경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에 근거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더불어 지력(知力)까지도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를 거저 받은 셈입니다.

필자의 나눔공동체의 뿌리는 1990년대, 미국에서 예수회의 창설자인성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spiritual exercise)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깨달음, 오병이어(적) 기적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군중 5천 명 (여자와 어린이는 뻗 숫자)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대 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1-14, 마태복음 14:13-21, 마가복음 6:30-44, 누가복음 9:12-17 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구나, 유목생활을 하던 그 시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어쩌면 갖고 있던 음식을 내놓아 나누었을 것이구나. 그리하여 남자만 5천명이던 엄청난 수의 군중이 함께 배부르게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구나.” 물론 신앙의 신비로 기적을 받아들이지만 성경을 때로는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농후한, 학자배경의 저는 가끔 저의 마음에 오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그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한 복음에는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으며 나누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놓아 나누니,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나 남은 믿기지 않는 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것 아닐까요? - 이것이 제 해석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로 나눔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느님은 왜 나에게 돈을 가질 수 있게 하셨을까? 아, 나누라고 (물론 제 이기심에 아직, 모든 재화를 모두 나누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재화도, 재능도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눔공동체 운동’은 저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와서는 학자 경험을 보태 이론 정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 강재섭 당 대표님의 도움으로 “나눔봉사위원회”를 조직하며 헌혈운동 등을 시작하였고, 또 지난 2007년 9월부터는 한나라당 제6 정책조정위원장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약으로 대한민국을 “나눔 공동체”로 만들자는 공약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식 공약입니다). 지금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모를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나눔공동체”는 기록으로 존재하는 이번 정부의 핵심공약입니다. 또한 2008년 6월 12일 명동성당에서 평화신문, 평화방송 20주년 성년행사의 주제를 나눔 공동체, 그중에서도 생명공동체로 기획하며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눔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서 정리 되었습니다. 행운을 가져오는 네잎 클로버의 네 잎같이 인생에 행운과 축복과 은총을 가져오는 네 가지의 나눔을 저는 나눔이라 정리합니다.

저의 나눔에 대한 기본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눔이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나눔이라는 사실, 또, 나눔은 독립적인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생, 수태의 순간(태아)부터 천국(노후)까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소중한 경험으로 저는 나눔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석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운동 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불행하다는 인식과 그외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주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이 운동은 마음에서 진정 우리나라와 자발적이어야 하되, 국가적으로는 새마을운동 같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운동으로 승화되면 좋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눔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기본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눔공동체 운동은 우리 사회를 신나는 사회, 따뜻한 사회, 사랑이 가득한 사회로 변화시킬 것임을 굳게굳게 믿습니다. 2007년 대선공약, 2008년 총선거약에 들어가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불씨는 당겨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같길은 멀어 보입니다.

저의 나눔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 나눔을 적극적으로 하는 생명나눔공동체 입니다.

둘째, 행복 나눔을 습관화 하는 행복나눔공동체 입니다

셋째,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공동체 입니다.

넷째, 꿈과 희망, 소망을 이웃과 나누는 배려의 꿈나눔공동체입니다.

첫째, 생명나눔 운동입니다.

생명나눔은 이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대혈 공여, 헌혈, 장기기증 등이 있습니다. 또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배워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소프트파워, 소프트웨어적인 21세기의 생명나눔 운동이지요. (주: 이하 자세한 부분들은 역시 ‘안명옥의 무지개나라’ 네이버 블로그 참조)

생명나눔과 함께 반드시 생각할 부분은 생명존중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생명나눔의 근본 철학입니다. 생명나눔운동이 생명존중사상의 중흥과 함께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명나눔의 대표적인 예로 세가지를 예시하겠습니다. 헌혈과, 장기기증, 그리고 제대혈 공여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능숙하게 익혀서 주변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소프트파워, 소프트웨어적인 생명나눔운동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는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 국민의 응급처치 요원화, 즉 어린이들도 심폐소생술 익히는 전 국민적 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한번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을 배움으로서 일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지식과 행위 아니겠습니까?

둘째, 행복나눔 운동입니다.

생의 여정에서 행운, 분에 넘치게 받은 행복이라 할 수 있는 모아진 물질을 나누는 기부운동이 되겠습니다. 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옷, 가구, 물건 등 물질 기부가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하지 않거나 내가 안 쓰는 물질을 어찌면 어떤 이웃은 매우 요긴하게 쓸지도 모릅니다. 집 안에, 옷장에, 찬장에 그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소유에의 지양이지요. 가족 간 나누고, 이웃 간에 나누고, 내가 가진 축복을 나누는 것은 사실 당연한 나눔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누면 풍족하고 나누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가뜩이나 모두 어렵고 추운 이 시절 행복나눔으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만들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1989년 이래로 기회 될 때마다 주창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은 물건나눔은 지금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가구 등 큰 물건들 까지도 물 흐르듯, 주고 싶은 사람의 물건을 수집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배달이 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이것이 제가 생각한 시스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비교적 쉽겠지요.)

개인 말고, 회사 등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社 1人 결연도 있겠고 이익의 사회환원, 즉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회사들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운동 등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상, 가까운 가족과 친척과 이웃부터 이러한 나눔이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만 생각지 마시고, 멀리에 있는 분 돕지 못한다고 안타까와 하지 마시고 내 가족, 형제 중에 어려운 분, 친척 중에 어려운 분, 우리 동네 이웃 중에 어려운 분부터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질만이 아니고 마음의 어려움은 없는지 까지 살피고 배려하고, 보살피는 일일 겁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사회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공동체로, 나눔공동체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랑나눔 운동입니다.

적극적인 자원봉사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에는 병원 자원봉사, 급식봉사, 농어촌 일손돕기, 그 외에 다른 분들 돌보기, 여러 형태 다양각색의 봉사 등, 몸으로 하는 자원봉사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서, 나의 몸을 사용하여 남을 위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의 도움을 받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몸을 써서 누군가를 위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 사는 보람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곤고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내 몸을 쓸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으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하는 것이지요.

한편, 자신이 가진 고매한 지식이나 재능을 나누는 자원봉사도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능나눔이지요.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지식과 재능이기도 하지만 그는 분명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는 일이란 진정 인생을 사랑하는 일 아닐까요! 개인이 할 수도, 가족, 친구들 혹은 소모임, 단체, 회사가 주체가 되어 할 수도 있지요. 나의 시간의 일정부분, 나의 재능의 일정부분을 나눔으로 내가 받은 축복을 사랑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재능과 시간의 기부입니다.

넷째, 꿈(소망)나눔 운동입니다.

꿈(소망 혹은 희망) 나눔 운동은 우리의 아름다운 장밋빛, 무지개 빛 꿈을 나누려는 운동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고 재능이 있고 생명이 있다 해도 꿈과 희망이 없으면 이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 수 없습니다. 자살현상은 꿈과 희망의 소실을 보여주는 극한 상황입니다. 꿈과 희망, 소망의 나눔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나눔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본인 자신과 이웃에게 꿈을 나누는 천사가 되기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자살율 1위인 이 나라에서 꿈 나눔은 자살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의 가족과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의 온유함, 그리고 사랑의 전달이 이 세상을 단 순간에 낙원(천국)으로 바꿀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흐른다고 감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베푼 사랑이 안돌아 온다고 초조해 하지 마세요. 인상적이었던 사랑의 느낌은, 그 강력한 학습의 느낌은 바로 다른사람에게로 전염되어 흘러 갈 겁니다. 사랑의 말과 행위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업에 바로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듯, 햇빛은 사람에게 하는 따뜻한 행동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햇빛은 분께 하는 행동이 아니라도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 부처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모든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부처님)이 몸, 혹은 마음이 아프시다면 진심으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위로하려 하시지 않겠습니까?

꿈 나눔의 한 예로 운동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꿈꾼 드림스타트 운동이 그 예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헤드스타트나 영국의 슈어스타트를 기본으로 발전시킨 프로그램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건강한 아이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상황에 최고로 적절한 보건, 복지, 보육, 교육 및 문화의 통합형 맞춤형 예방형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꿈꾼 것입니다. 모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제가 2004년 주창했고, 박근혜 당대표께서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한 아동 복지의 큰 틀로서, 그 후 한나라당 내 본격적인 TF팀이 발족하여 튼튼아이 건강미래, 결식아동 없는 세상, 부담없고 따뜻한 육아, 좋은 학교 희망교육, 사랑받는 아이세상, 장애아이 행복나라, 즐거운 놀이문화 등 7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운동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동의 주창으로 전 정권에서 받아들여져서 우선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어린이들이 대상으로서 2007년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병의원, 학원, 사회복지관을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32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9년은 75개 지역, 2010년에는 101개, 2011년 1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인 부분도 풍부하게 첨가하여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등과 연계하는 작업도 내용에 들어가기를 처음 이 프로그램을 꿈꾼 장본인으로서 절실히 바랍니다. 이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이 꿈과 소망으로 밝은 인생을 시작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 소망나눔의 또 하나의 예로, 장애인이거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는 활동들입니다. 나와 다르면서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일은 모든 나눔에 스며들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한번뿐인 소중한 삶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 꿈 나누기라 할 수 있지요.

나눔운동도 착한 마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되어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하여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운동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나눔공동체를 만드는 기초일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로 나눔을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부분은 오로지 나의 선택입니다. 나눔공동체에의 지향은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과 사회 갈등을 푸는 최상의 해결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함께 빠르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팀 스피릿은 공동체 정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를 끝으로 인용합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

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당시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통한 제안이나 사랑의 경제인 ‘공유경제’에 대한 생각은 꼭 나누고 싶은 생각들이지만 여러 상황상 오늘의 발표에서는 생략합니다.)

토 론 문

강 학 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들어가며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그 사명을 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논함에 있어 개인의 자선기부 관련 과제, 개인의 종교기부 관련 종교기관 나눔의 과제,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Philanthropic Market)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 등의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하여 다시금 환기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발표자가 제시하신 과제들의 논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공동모금회 창립초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모금규모,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와 자세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에 토론인으로서 개인의 종교기부 관련 종교기관 나눔의 과제를 제외한 두가지 분야에 대한 몇가지 추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선기부 관련 과제-폴뿌리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발표자가 제기하신 과제들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공동모금회법 제1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동모금회는 2010년도 모금회 비리사건 이후 뼈를 깎는 조직쇄신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사명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폴뿌리 기부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중심의 배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개인 기부 물모델 육성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기부 물모델을 육성하는 방법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등 개인고액기부자의 사회적 모임을 육성하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부여한다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대통령과 기부자 대표(고액기부, 서민기부 등)가 사회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민간기부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액기부 및 개인기부, 장기기증, 봉사활동을 실천 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훈포장 수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초중등 교과서에 관련 내용 수록 등 사회적 예우 등의 방법을 범사회적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산 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측면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부동산 기부시 비영리조직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보유 제한 및 국세청 제출 기부가액 및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 불일치 등으로 기부 및 기부금 처리가 매우 어려운데,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 대부분의 외국 고액기부는 현금인 아닌 주식 및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 기부금품의 세제가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 및 기타 유가증권, 물품 등의 기부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아름다운재단의 계획기부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유산 기부는 그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발표자가 언급하신 나눔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나눔문화의 배양을 위하여 매월 특정일을 “나눔데이”로 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함과 아울러 전국 전광판 광고 및 지하철 역사 PDP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기부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부문화체험 교육장인 “나눔문화관” 운영, 기부문화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등 지금까지 해오던 아동·청소년 대상 홍보사업 외에 나눔문화 교육교재 및 교구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단지 공동모금회를 위해서만 벌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부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대하고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부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공동모금회 뿐 아니라 다른 모금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의 모금은 한정된 재원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주로 배분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이에 필요한 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대 노력은 새로운 나눔 상품 및 나눔 방법의 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주체에 의한 나눔 실천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제언

먼저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재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어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복지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앞장서 모금을 할 경우, 과거의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모집의 폐해가 재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복지분야의 자원 고갈 및 실질적 이중과세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기부문화의 정착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인 기부금이라도 접수할 수 없도록 명시한 위 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하는 까닭은 지자체장이 대표를 겸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설립한 복지재단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시행령(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금 현장에 있어 최근 나눔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나눔문화가 일신우일신 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금번 통계청에서 「2011년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자원봉사에 대하여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2011. 7. 15.~29.(15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결과 - 나눔문화”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발제자가 발표한 자료와 함께 모금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 더많은 나눔이 있는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과 같이 뜻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발표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신 강철희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론 문

김 현 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블런티어21 공동대표

자원봉사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

들어가는 말

사회문제 해결과 공익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부와 자원봉사(giving & volunteering)는 민간부문 참여의 두가지 수단으로 오늘 ‘누가 어디에 기부 및 자원봉사 하는가 - 나눔 주체와 선호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나눔문화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장에서 토론하게 되어 기쁘다.

토론에 앞서 나눔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흔히 나눔과 관련하여 봉사와 나눔, 나눔과 기부, 재능나눔, 재능기부, 기부와 자원봉사 등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교통정리를 하자면 나눔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포괄하는 용어이며 금전을 나누는 것을 기부(giving)라 하고, 서비스를 나누는 것(재능을 나누는 것을 포함)은 자원봉사(volunteering)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는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올바른 용어가 보급되기를 희망한다.

발제자의 발표내용은 기부 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결론 부분의 나눔문화 발전방향에서도 모두 기부에 관련된 내용이며, 자원봉사는 기부를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만 언급되어 자원봉사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에 기부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오히려 자원봉사 부문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한다. 1) 먼저 발제자의 발제 내용과 관련한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 2011년도 볼런티어21 조사결과¹⁾를 참조하여 토론하고, 2)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II. 조사자료를 통해 본 우리나라 자원봉사 현황과 과제

1. 자원봉사 참여율의 정제

발제자의 Giving Korea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3, 2005, 2007, 2009년도에 각각 17%, 27%, 16%, 24%로 크게 오르내림을 보이며 특히 2007년에서 2009년도에 8% 급상승을 보인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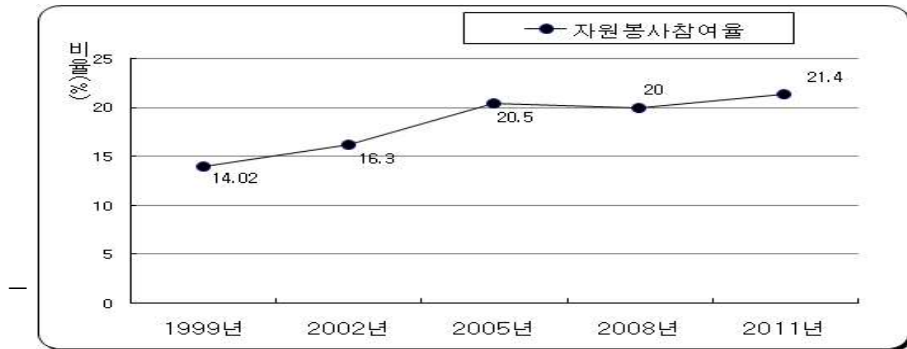
볼런티어21 조사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4.0%, 16.3%, 20.5%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 볼런티어21은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전국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토론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오면서 조사표 설계, 정책제언 등을 함께 해왔다. 조사내용은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자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얼마나 활동하는가? 자원봉사 참여율, 참여시간, 참여동기, 참여유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참여경로, 과거의 경험들과 이웃 또는 따로 사는 가족과의 접촉과 사회적 사교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우리나라 기부자는 누구인가? 왜 기부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 기부하는가? 기부 회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기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향후 기부 참여의향은 있는가? 자원봉사와 기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난 12월 7일에는 2011년 조사결과 발표세미나가 열렸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원봉사 및 기부 추이와 정책제안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본 토론회에 인용되는 내용은 세미나 자료다. **볼런티어21, 2011 전국 자원봉사실태조사 결과보고 세미나 자료집**

2) 참여율의 등락폭이 너무 커서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조사방법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그렇게 변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20.5%, 20.0%, 21.4%로 나타나서 오차범위 ($\pm 2.5\%$) 내에서 정체 현상을 보인다.

<그림1>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 변동추이



출처: 불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34

2008년 조사당시 바로 전년도 말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150만명이 복구활동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의 붐을 이룬 듯 했고,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차원의 자원봉사 참여확대, 대학들의 사회봉사 학점제 확대, G20정상회의(2010) 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 등의 대형 국내외 행사 개최에 따라 외견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참여율은 정체를 보인다. 자원봉사 참여율 정체현상의 이유를 분석하여³⁾ 이를 해소하고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참여율은 2007년도에 수립한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5개년계획(2008~2012)’이 목표한 성인자원봉사 참여율 30%에 한참 못 미치며, 주요 선진국의 참여율과 비교해서 아직 부족하다.(불런티어21:2011:35)

3) 이유 중 하나는 2007년 이후 경제침체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많은 자원봉사활동자들이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표1> 주요 선진국 대비 자원봉사 참여율

국가 (조사 연도)	영국 ¹⁾ (2010)	미국 ²⁾ (2010)	호주 ³⁾ (2010)	한국 ⁴⁾ (2011)	싱가포르 ⁵⁾ (2010)	일본 ⁶⁾ (2011)
참여율	40%	26.3%	38%	21.4%	23.3%	27%

¹⁾ 영국: 16세 이상 인구 중 조직 또는 그룹을 통한 공식적 자원봉사활동을 말함. Citizenship Survey: 2009-2010

²⁾ 미국: 여기서 자원봉사자란 16세 이상의 인구 중에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이고 무보수(활동비용을 제외한)의 활동을 한 사람. (Bureau of Labor Statistics of the US Dept. of Labor). 2001년도 Independent Sector Survey에는 44%(21세 이상 성인)

³⁾ 호주: 18세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호주 통계국 자료

⁴⁾ 한국: 20세 이상 성인 중 등록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⁵⁾ 싱가포르: 15세 이상 공식적인 자원봉사활동 Individual Giving survey, National Volunteer & Philanthropy Center

⁶⁾ 일본: by Japan Institute for Social & Economic Affairs

※ 이들 나라 모두 강제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함.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35

2. 낮은 자원봉사 참여 시간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참여시간은 2005, 2007, 2009년도에 각각 39, 52, 61.7시간으로 이는 주당 환산하면 0.8, 1.08, 1.29시간에 해당되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자원봉사자 1인당 주 평균 참여시간이 1999, 2002, 2005, 2008, 2011년도 별로 각각 2.1, 1.9, 1.02, 2.37, 1.92시간. 주평균 1.92시간은 선진국 수준인 주 평균 3시간의 2/3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다.(행안부 2011:9). 또한 2008년도 2.37시간에 비하여 0.45시간 감소.

3. 낮은 정기 자원봉사 참여율

정기참여비율이 2003, 2007, 2009년도에 17%, 17% 정도에서 23.7%로 증가. (정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2011년도에는 정기자원봉사를 분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각각 7.7%, 18.7%, 15.9%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원봉사자의 34.6%는 월 1회 이상 정기봉사를 하며 나머지는 65.4%는 일년에 한두번 또는 서너번 참여하고 있다. (볼런티어 21 2011:43)

장기적이고 장시간, 그리고 정기적 자원봉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있다. 그래야 자원봉사자 자신과 봉사를 받는 대상에게 변화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4. 자원봉사활동의 금전적 가치

2009년에 자원봉사 총 시간은 5억4700만시간이며 여기에 2009년도 최저임금인 4,000원을 곱하여 2조1880억원을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금전적 가치로 보았다.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2011년에 자원봉사 총 시간은 8억3697만8978시간이며 여기에 전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 15,938원을 곱하여 13조3397억원을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금전적 가치로 보았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14%.(볼런티어21, 2011:48)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길수록 금전적 가치가 늘어나고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커질 것이므로 자원봉사자 수 및 참여시간을 늘이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표2> 연간 자원봉사 시간과 가치

구 분	2011년	2008년	2005년	2002년	1999년
1개월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1.95시간 ¹⁾	3.24시간	3.6시간
1년 자원봉사자 1인당 주간 평균 자원봉사 시간 수	1.92시간	2.37시간	1.02시간 ²⁾	1.9시간	2.1시간
총 자원봉사자의 연간 총 자원봉사 시간 수	8억3697만8978 시간	9억1147만 6582 시간 ³⁾	3억8756만3699 시간 ³⁾	5억3237만6609 시간	4억9892만 시간
총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의 연간 금전적 가치	13조3397억원	10조1255억원 ⁴⁾	3조1710억원 ⁴⁾	3조6196억원	2조7141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1.14% (1,172.800조원 -2010년)	1.27% (798.057조원 -2007년)	0.46% (693.995조원 -2004년)	0.6% (600.866조원 -2001년)	0.56% (487.184조원 -1998년)

1999, 2002, 2005년은 지난 1개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1년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시간을 추정하여 계산함. 2008, 2011년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시간을 물어 이를 기준을 계산함.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8

5. 자원봉사자 특성별 참여현황

소득, 연령,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과 시간이 높고, 종교별로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없음의 순으로, 직업별로는 자영업, 화이트컬러, 블루컬러 순으로 참여율과 참여시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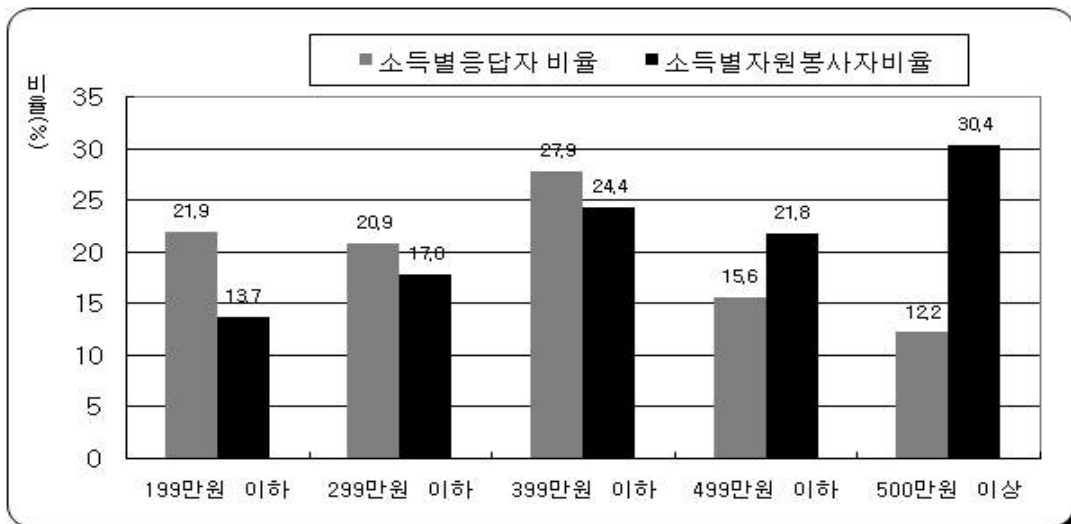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별로 경향이 Giving Korea 자료와 비슷하다, 즉 2011년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이 13.2%, 21.2%, 25.0%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소득별로 보면 199만원 이하, 399만원이하, 500만원이상이 각각 13.7%, 24.4% 30.7%로 나타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그림2>. 그러나 연령계층별로 보면 50대와 20대가 25.9%와 24.7%로 참여율이 가장 높고 30대가 15.5%로 가장 낮았다. 60대이상의 참여율은 19.3%로 전체 평균보다 낮으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자원봉사자 특성별 자원봉사 참여율

구 분	전체응답자중 비율				
	2011 (자원봉사자수/응답자수)	2008	2005	2002	1999
성별					
남자	21.3(158/739)	20.1	17.6	15.5	12.7
여자	21.4(163/761)	19.9	23.4	17.2	15.3
연령					
20대	24.7(64/259)	17.4	19.9	17.4	12.4
30대	15.5(50/320)	15.8	17.8	10.7	12.5
40대	22.8(77/338)	25.4	25.1	23.0	18.1
50대	25.9(73/282)	26.5	24.1	16.1	14.1
60세 이상	19.3(57/301)	15.6	16.5	—	—
혼인상태					
미혼	21.7(71/327)	15.4	19.6	16.3	14.6
기혼	21.6(239/1105)	21.8	21.1	16.3	13.9
이혼/사별	15.1(10/68)	11.9	16.1	16.7	—
학력					
초졸이하	—	—	—	8.2	7.7
중졸이하	13.2(35/268)	15.4	13.9	20.6	11.7
고졸	21.2(127/601)	19.2	21.8	15.0	15.2
대재이상	25.0(158/631)	23.1	22.1	18.9	16.3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36

<그림2> 가구 소득별 응답자 대비 자원봉사자비율 분포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38

<표4> 직업별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비율(%), 명

구 분	2011 (1년간 자원봉사자수/ 전체응답자수)	2008	2005
농/임/어업	35.1 (13/37)	23	21.1
자영업	18.9 (67/354)	22.3	21.6
판매·서비스직	18.1 (49/271)	15.8	13.4
기능·숙련공(생산직)	13.0 (9/69)	9.3	14.3
일반작업직	— —	—	6.1
사무·기술직	23.4 (57/244)	21.5	21
관리직	33.3 (3/9)	36.8	16.7
전문·자유직	30.4 (7/23)	31.4	42.9
전업주부	19.7 (62/314)	20.2	24
학생	32.5 (38/117)	21.9	28.1
무직	25.8 (16/62)	20.6	21.3
합 계	321/1,500	398/1,989	331/1,611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39

<표5> 종교별 전체 응답자 중 1년간 자원봉사자의 비율

단위 : 명 (%)

구 분	2011년	2008년	2005년	2002년
불 교	65/331(19.6)	94/431 (21.8)	67/402 (16.7)	74/389 (19.0)
개신교	114/369(30.9)	132/456 (28.9)	106/364 (29.1)	65/312 (20.8)
가톨릭	40/107(37.4)	51/168 (30.4)	52/171 (30.4)	37/132 (28.0)
기 타	3/13(23.0)	3/15 (20.0)	2/12 (16.7)	5/16 (31.3)
믿는 종교 없다	99/681(14.5)	118/919 (12.8)	104/662 (15.7)	66/663 (9.95)
합 계	321/1,500(100)	398/1,989 (100)	331/1,611(100)	247/1,512(100.0)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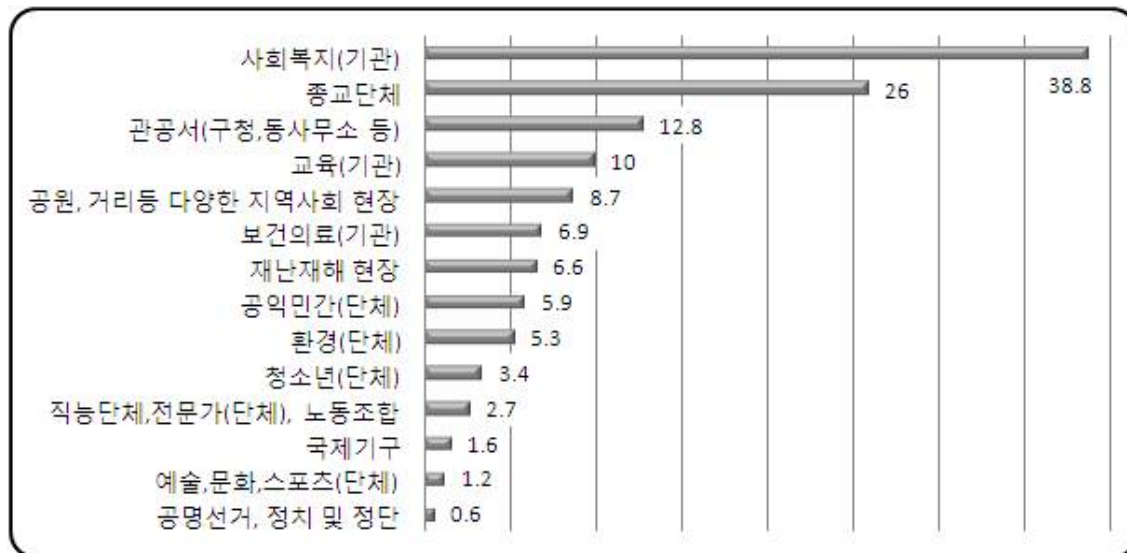
6. 자원봉사 활동기관의 편향

자원봉사 활동처로 종교단체(39.3%), 자선단체 (32.8%), 공공기관(27.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선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사회복지기관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처로 사회복지기관 38.9%, 종교단체 25.9%, 관공서 12.8%, 교육기관 10.0%의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선진국에서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포츠영역은 낮아 이 분야의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그림 3> 1년간 참여 자원봉사활동기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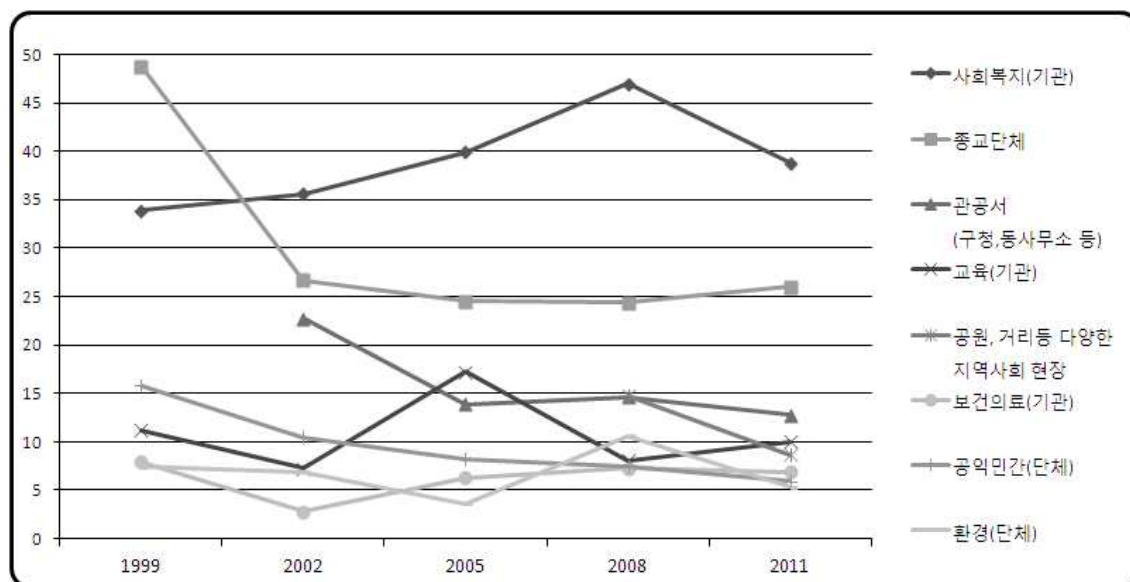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4

<그림 4> 지난 12년간 상위 5개 자원봉사활동기관의 변화 (1999~2011)

단위 : %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5

지난 10년간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1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환경영역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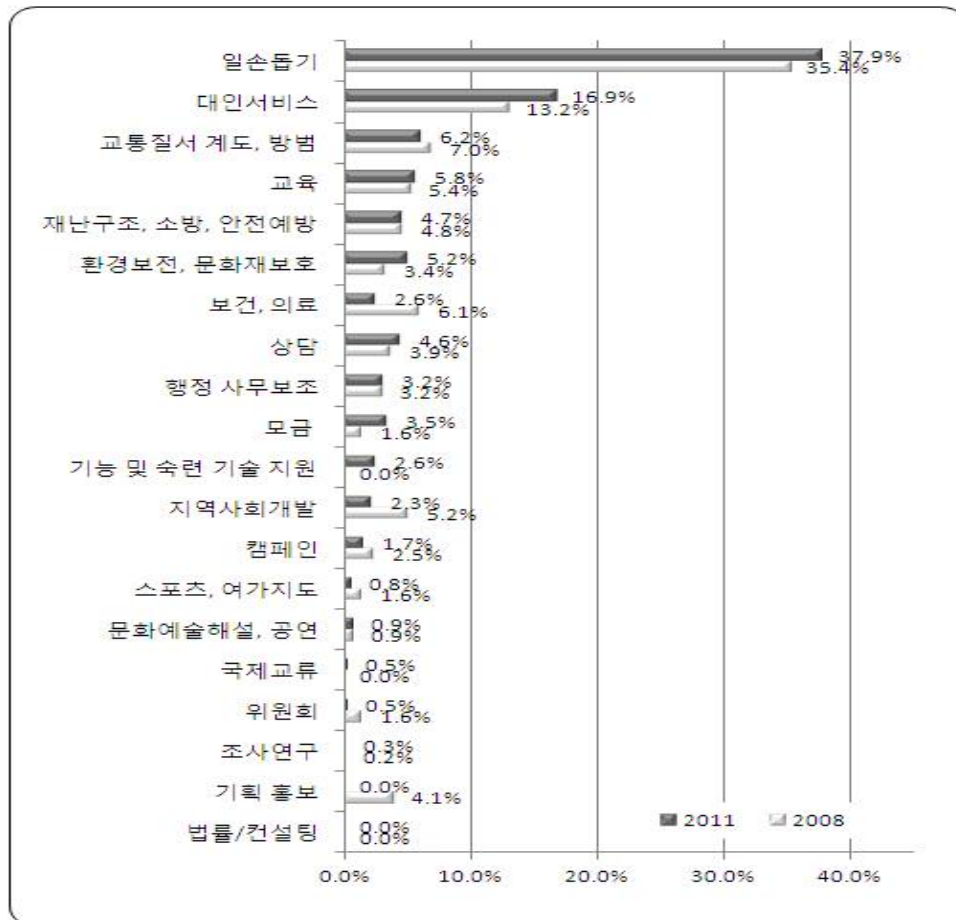
익민간단체가 1999~2005년도에 상위 5개 기관내에 포함되었으나 2008년, 2011년도에는 감소하였다. 이 분야의 시민참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7. 자원봉사 활동 유형의 편향

자원봉사 활동유형에 단순 노력봉사가 83.1%, 전문봉사 6.6%으로 나타남.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일손돕기 37.9%, 대인서비스 16.9% 등 상대적으로 단순 서비스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전문성을 살린 활동은 미미하여 직장인, 은퇴지식인들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활동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5> 1년간 참여한 자원봉사활동영역(2011, 2008)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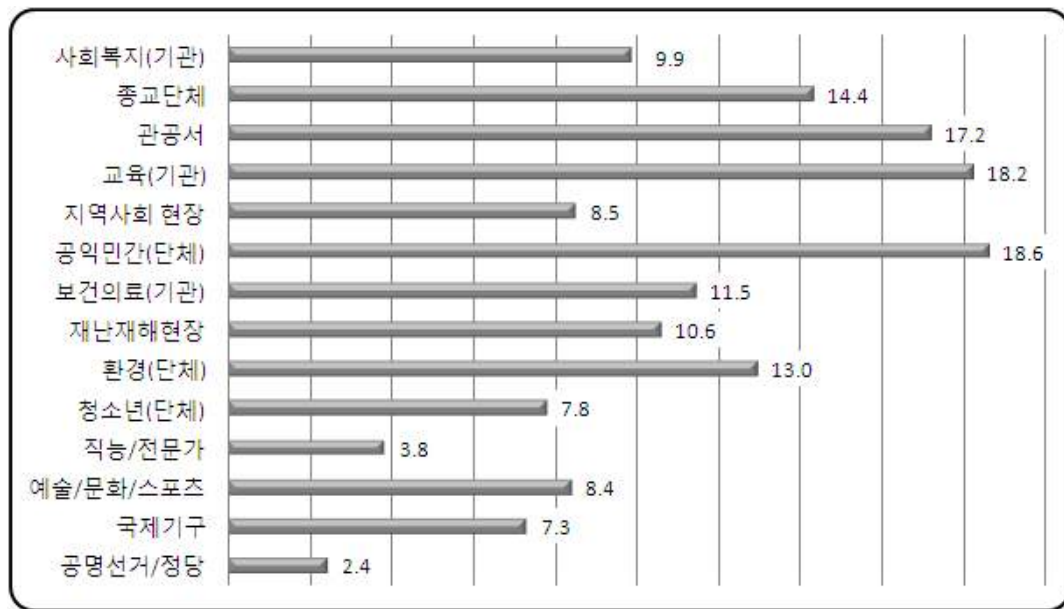
8. 활동기관별 자원봉사 활동 시간

자원봉사 활동처 별 연간 자원봉사 시간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56.0시간, 종교단체 50.9시간, 시민단체 47.4시간 의료기관 44.5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으로 환산하면

4.66시간, 4.24시간, 3.95시간, 3.71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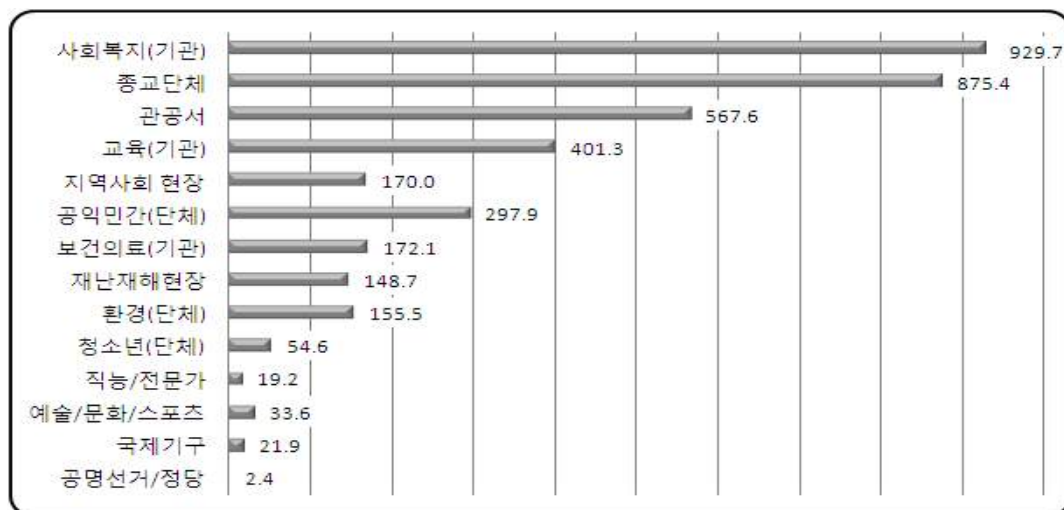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2011년 활동기관별 1인당 월평균 활동시간은 공익민간단체 18.6시간, 교육기관 18.2시간, 관공서 17.2시간, 종교단체 14.4시간, 환경단체 13.0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기관별 월간 총 활동시간은 사회복지기관 929.7시간, 종교단체 875.4시간, 관공서 567.6시간, 교육기관 401.3시간의 순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의 1인당 월평균 활동시간이 9.9시간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적음에도 참여자 수가 많기 때문에 총 활동시간은 가장 많다.

<그림 6> 활동기관별 1인당 한 달 평균 활동시간 (2011)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6

<그림 7> 활동기관별 한 달간 총활동시간 (2011)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47

9.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로

활동처 인지경로는 종교단체, 시설자체, 지인, 개인적 28.3%, 20.8%, 19.0%, 12.8%의 순이다. 8.8% -> 활동요청권유 필요

볼런티어21 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처음 참여경로는 단체 조직을 통해 53%, 타인의 권유로 26.5%, 가족 친구 활동을 보고 21.8%의 순이다.

10. 참여 주요 동기

볼런티어21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참여동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78.9%),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78.4%),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서(77.6%)의 순이다.

11. 참여 경로, 방법

볼런티어21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는 ‘처음 소속단체(종교단체 포함)나 조직, 학교 및 직장을 통해서’가 53%, ‘누군가로부터의 요청’이 26.5%로 나타났다.

<표6>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처음 참여경로*

단위 : %					
구 분	2011년	2008년	2005년	2002년	1999년
1)누군가로부터 요청받음	26.5	34.9	32.3	23.5	20.5
2)자원봉사활동 하는 가족/친구 있어	21.8	10.6	10.0	9.7	7.4
3)자원봉사활동의 도움받은 가족/친구 있어서	5.0	2.8	1.8	1.6	—
4) 단체/조직/직장을 통해서	53.0	34.2	54.4	49.0	54.9
5) 라디오, TV, 기타 인쇄매체를 통해	3.4	2.3	0.6	2.8	1.9
6)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¹⁾	6.2	3.0	1.2	—	—
7) 스스로 참여	—	23.4	18.1	21.5	25.1
8) 인터넷을 통해	3.1	2.5	—	—	—
9)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0	—	—	—	—
10) 아파트, 주민센터 등 안내게시판을 통해	3.1	—	—	—	—
11) 건물 옥외/지하철/버스광고물을 통해	0	—	—	—	—

* 중복응답임.

1) ‘자원봉사센터를 통해’는 2005년 조사에서 새로 추가됨.

2) ‘인터넷을 통해’는 2008년에 새로 추가됨.

9~11) 소셜네트워크, 아파트 안내게시판, 옥외광고물 은 2011년에 새로이 추가

출처: 볼런티어 21 세미나 자료 p50

Ⅲ.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과제

1. 민간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원봉사센터 운영 독립성 보장

- 정부가 지역단위 자원봉사 진흥 촉진을 위한 인프라로서 설치 지원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상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민간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필요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법 제 19조) 현재 전국 248개 센터중 반 이상이 관 직영체제이며 오히려 민간센터들도 직영으로 회귀하는 추세에 있다. 직영 센터는 물론 민영센터도 지자체로부터 100% 예산 지원을 받다보니 인사권은 물론 사업운영에 있어서도 관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이 바뀔에 따라 센터 소장도 교체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개발 추진하는 대신 지자체의 크고 작은 행사를 지원하는 가시적 활동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다.
-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과 센터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 자원봉사활동 관리 방법의 개선

- 행안부는 전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시간을 등록하고 축적된 시간을 바탕으로 인증서 및 표창도 받을 수 있다. 활동시간 인정 표준 지침서도 만들어 시달하였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은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자원봉사센터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은 많은 에너지를 자원봉사 활동시간 관리에 쏟고 있다. 즉 한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야 하고 활동을 한 후에는 활동실적을 제출해서 입력하고 어떤 때는 활동시간에 인정되는 건지 아닌지 논란도 하고 결정한다. 자원봉사 제도화가 일정부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오히려 위축시키고 왜곡시킨다.
- 자원봉사 인프라가 활동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을 지원하고 단체를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의 보다 유연한 지원체제로 변화해야 한다. 활동시간을 바탕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

2.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

□ 시민들의 지역기반 활동 촉진

- 볼런티어21 조사결과 자원봉사자들은 비자원봉사자들에 비해 단체에 보다 더 많이 소속되어 있고, 주로 단체/조직/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 친구 등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소모임, 민간단체,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등의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민간 역량을 강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이들 시민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도록 “자원봉사 캠프”와 같

은 지역거점을 만들어 주고, “마을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의 리더십을 향상하고, 지역의 이슈를 해결하며, 아울러 활동의 지속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 활용 지원 및 인력 지원 확대

- 많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부와 기업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 부족과 인력부족으로 만성적인 피로감에 젖어있다.
- 정부는 이들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프로포즈)사업 확대하고 리더십을 가진 인력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모사업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참여시키는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개발 중인 코리아 헨즈 국가봉사단원을 배치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이들을 교육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시설에만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3. 자원봉사 가치의 보존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 과도한 인정보상과 인센티브 제도 규제

- 자원봉사자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하는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의 동기부여 및 활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정보상의 방법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중요함에도 최근 지자체 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개발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마일리지 제도'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적립하여 필요할 때 서비스를 되돌려 주도록 한든지, 일정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주정차 과태료 할인혜택, 구청 내 각종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혜택,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등 자원봉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과도한 물질적 인정보상과 인센티브 정책은 철회되어야 하며 대신 가치 홍보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유사 자원봉사 활동과의 명확한 경계 구분

-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의 봉사활동, 시니어클럽에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시니어통번역단, 숲생태해설사 등), 최근 개발된 노인요양사 활동이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우하우가 쌓이고 정보의 접근성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서 유급자원봉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적은 보수의 일자리 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보수를 받는 일자리나 유급성이 강한 업무에는 ‘자원봉사’ 표기를 삼간다.

□ 자원봉사 가치 홍보 및 문화 확산

-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하고 싶으나 막상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방

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런티어21 조사결과 비자원봉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가 5.8%로 ‘바빠서’(79.9%), ‘건강상의 이유로’(6.1%)에 이어 3번째 순이다. 이는 홍보를 통한 잠재적 자원봉사자 발굴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 참여자 중 1년 내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008년 18.0%에서 2011년 35.7%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자원봉사 인식과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는 사회적 책임과 이타적 동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참여율 증가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조사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61.9%)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가장 주력해야 하는 영역으로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52.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인정보상’(6.3%)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박미혜 조사결과 세미나 토론문 2011:87).
-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며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정보상 정책보다는 가치홍보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원봉사를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원봉사문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

4. 지역사회 문제와 자원봉사자 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 수요공급의 불균형 해결

-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즉 수요에 필요한 적합한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일감이 없다는 것이다. 수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 모집육성 하면 되지만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려는데 막상 보람을 갖고 일할 수요처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기관·시설과 종교단체, 관공서 등이 주요 활동처이고, 일손돕기, 대인서비스 등의 상대적으로 단순서비스 활동이 주를 이룬다. 공공기관에서의 활동은 행사지원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가지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프로그램 및 일감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 수요처가 각각 필요한 역할이 있다. 첫째, 자원봉사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시설, 공공기관, 학교, 비영리기관·단체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참여시켜 조직과 지역사회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곳곳의 수요처와 긴밀하게 네트워킹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수요처와 함께 새로운 일감을 개발한다. 셋째, 자원봉사단체들은 기존에 개발된 수요처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문제와 욕구를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관리자 및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바쁜 현대인의 참여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짧아지고 있으며 20대 연령층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월1회 이상 정기적 활동자는 34.6%이고 나머지는 일 년에 한두 번, 서너 번이

다. 또한 조사결과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중단의 이유’가 “바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단기성, 비정기성 참여 선호도와 청년층의 높은 참여율, 그리고 시간 없음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주말을 활용한 비정기적 프로그램, 온라인을 활용한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바쁜 현대인을 위해 활동이 용이하고 활동 후 보람을 맛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준과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파일럿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그 효과성을 드러내고 있는 **헨즈온(Hands-On)네트워크 및 볼런테어먼트 유형의 프로그램**이 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은퇴자와 노인들의 욕구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최근 베이비부머 첫 연령층이 은퇴하기 시작하여 향후 계속해서 지역사회로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 인해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이들 베이비부머 은퇴자와 노인들의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들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5. 자원봉사활동 및 관리 역량 강화

□ 이슈 분야별, 대상별 관리체계 표준화와 관리자 육성

-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내게 하려면 자원봉사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관리자가 필요하다.
-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높이고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높은 관리수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모든 자원봉사센터와 단체들이 받아들이고 표준지침을 활용 및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환경, 문화, 인권, 재난재해 등 이슈분야별로 그리고 청소년, 노인, 은퇴자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게, 단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학생자원봉사 및 봉사학습을 지도할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 이슈분야별 리더와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

- 활동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분야별, 대상별 리더들을 확보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 하는 나눔문화의 정착

오늘 본인은 기부와 자원봉사 두 주제 가운데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하였으나 글을 맺으면서 기부 따로 자원봉사 따로가 아닌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 하는 나눔문화의 정착을 제안한다. 기부와 자원봉사가 모두 나눔 문화 발전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굳이 중요도를 따진다면 자원봉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원봉사와 기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원봉사자

는 대부분이 기부자이지만 기부자 중 일부만이 자원봉사자다. 볼런티어21 조사자료에 의하면 기부자의 27.1%만이 자원봉사를 하나 자원봉사자의 81.0%가 기부를 한다.(볼런티어21. 2011:65)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원봉사기금 모금이 간편하며 충분한 명분이 있지만 현행법에 의해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의 모금은 허용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모금회를 설치하여 자원봉사기금을 모금하는 방안이거나 공동모금회에 자원봉사기금을 설치하여 기업과 개인들의 지정기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서구 주요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제1영역이 모금활동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모금활동과 자원봉사활동 모두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의 자원봉사조직의 모금활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를 함께하는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발제자는 물론 더 많은 학자들이 기부 부문과 함께 자원봉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한다.

토 론 문

임 혜 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현황) 최근 우리사회에 나눔과 봉사는 사회적 대세로 널리 확산 중

○ 2009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이명박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비롯하여,

- 올해에만도 정몽준 회장의 2000억원 등 현대가의 5000억 규모의 아산나눔재단 설립, 정몽구 회장의 5000억 통근 기부, 그리고 얼마 전 안철수 서울대교수의 1500억대 주식기부 등 사회지도층의 나눔실천이 급증

○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기부확산과 함께, 짜장면 천사 故 김우수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

○ 이러한 나눔문화 확산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

- 물질 기부인 기부금 규모는 2009년도 9.6조원으로 '99년도의 2.9조원에서 10년간 3배 증가하였고

- 인적 기부인 2009년도 자원봉사자는 약 86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9.3%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 헌혈,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등 생명나눔 실천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0년도 장기기증 서약 실천자는 약 12만명, 헌혈 참여자는 266만명 수준

□ (한계)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

○ GDP 대비 기부금 비중 0.85%로 미국(2.2%)의 2/5 수준에 불과

- 기부금 중 개인기부 비율은 64%(미국 75%)로 낮으며, 특히, 개인기부 중 80%가 넘는 금액이 종교 단체에 기부

○ 나눔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이를 실제 생활속의 나눔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11 정책) 정부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나눔확산' 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생활 속의 쉬운 나눔 확산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첫째, 나눔종합정보제공 사이트 ‘나눔넷’을 구축하여 나눔기관 소개 및 다양한 실천정보 제공하고,

- 둘째, “행복나눔 N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N마크 부착제품을 구매하면 기업이 수익금의 1%내외를 기부하는 생활 속 나눔 실천을 유도,

- 셋째,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 기부금은 30%, 법인기부금은 10%로 확대하였고,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사회적 인정 강화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숨겨져 있는 생활속의 나눔 실천 사례를 발굴·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추진

- 금년도 1월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생명나눔, 장애인 관련 나눔 등 매월 주제를 달리하여 숨겨진 나눔 실천자를 발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이달의 나눔인’을 추진(매달 20~30명 선정 포상)

-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나눔실천 유공자 40여명에게 훈포장등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나눔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

-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날’과 연계한 ‘나눔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행사, 나눔인 포상, 연말 집중 나눔을 추진 중

3)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 빌게이츠, 웨런 버핏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나눔 실천은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 외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우리나라 고액 개인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사회지도층 등의 멘토링 참여사업인 ‘휴먼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산기부, 금융상품 기부 등 기부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

4)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

○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건 등 잇따른 성금유용 사건으로 모금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회복이 중요한 과제.

- 첫째, 온라인 기부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클린카드 등 운영기준 강화로 공동모금회를 쇄신하였고

- 둘째,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대상 모금기관 범위를 자산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 총수익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강화된 투명성 요건 충족시 모금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부여

- 셋째, 기부자들이 연말에 기부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확대하였고,

- 넷째, 모금기관 담당자들이 투명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금기관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

5) 나눔국민운동 전개

○ 민간주도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17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7월 설립되었고

- 나눔국민운동 출범식, 국제나눔컨퍼런스,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등 다양한 국민참여행사를 개최하였음

○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대 광역도시에서 98만명이 참관하여 국민들이 나눔을 실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국민적 교육장으로 활용

□ (2012 계획)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법·제도 도입을 통한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할 예정

1) 나눔의 제도화

○ 나눔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존의 캠페인 중심에서 나눔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

- 공익신탁법 등 나눔관련 법령, 기부연금·기부자조연구금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나눔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능 강화

2)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 이러한 제도화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참여 캠페인 지속 추진이 필요

－ 나눔국민운동본부 등 나눔기관 및 단체와 함께 나눔백일장·사생대회, 제3회 나눔대축제 등 국민참여 캠페인을 추진

－ 사회지도층 등의 직업군별·분야별 ‘휴먼네트워크사업’ 확대, 업종별 차별화된 ‘행복나눔 N 캠페인’ 모델 개발, 초등학교부터 나눔정신이 함양될 수 있는 나눔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

3)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 기부내역 확인서비스 등 모금기관 투명성을 더욱 확대

－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 및 기업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부 록 1>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연혁 및 구성원

2009

- 2009. 10. 15 발기인 이정숙외 2명, (가칭)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설립 논의
- 2009. 10. 21 제 1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토론회 개최 구상
- 2009. 10. 25 (가칭)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 사무실 서울 서초동 계약
- 2009. 11. 07 서초동 사무실 입주
- 2009. 11. 09 발기취지문 작성
- 2009. 11. 10 정관 작성
- 2009. 11. 12 이사진 구성 (회장:이정숙)
- 2009. 11. 15 건국대 행정대학원 하미승 원장 방문, 토론회 주제 선정
(주제 : 미래 한국 복지 건설을 위한 신구상)
- 2009. 11. 15 토론회 장소 섭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2009. 11. 21 토론자 및 초청인사 선정
- 2009. 11. 23 주제발표자 선정 강육모 교수(국립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09. 11.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방문, 협조 요청
- 2009. 12. 04 홈페이지 도메인 확정 구매
- 2009. 12. 09 제 1차 토론회 발표논문 총 100부 제작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선진복지국가 진입을 위한 토론-

주제 발표:강육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자:

- 1)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14.15대 국회의원)

- 2009. 12. 16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 이사모심
- 2009. 12. 18 1차 토론회 자체 평가회
- 2009. 12. 20 박범진 前 총장
(前한성디지털대학교,現미래정책연구소이사장) 고문으로 모심
- 2009. 12. 21 홈페이지 세부항목 구상
- 2009. 12. 22 1차 토론집 재편집 100부 추가 제작
- 2009. 12. 22 제2차 토론회 개최 논의, 주제 컨셉트(지방사회 복지) 선정

2010

- 2010. 01. 23 제 2차 토론 주제발표:백종만 교수(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2010. 01. 23 성남 서현동으로 사무실 이전

2010. 01. 25 경기도 성남시 신청사 대강당 장소 확정
 2010. 02.01~05 발표자 선정
 2010. 02. 23 2차 토론회책자 200부 발부
 2010. 02. 25 2차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운누리관)개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선진지역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토론-

주제발표: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토론 패널: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사회복지학과)
-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이규택 공동대표(미래희망연대),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2010. 03. 10 장석권 前 단국대 총장, 김경우 성남사회복지연합회 회장 고문으로 모심
 2010. 06. 07 3차 토론회 준비, 주제자 및 날짜 확정
 정무성 원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위원)주제자로 선정
 2010. 06. 08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장소 확정
 2010. 06. 10 토론 주제 '한국적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선정
 2010. 06. 15~20 토론자 선정
 2010. 07. 01 박범진 전총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김창남 교수,
 이정숙 회장 3차 토론회와 관련 오찬 및 논의
 2010. 07. 01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고문으로 모심
 2010. 07. 04 이애련 교수 (경원대 아동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0. 07. 08 유병용 교수(한국정신문화원 기획처장) 이사로 모심
 2010. 07. 09 서울특별시 후원 명기승인
 2010. 07. 12 3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 론 자: 1. 박현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MBC인터넷 뉴스 풀영상취재 조선일보 '플라자' 에 토론회 기사 게재
아름방송(성남), C&M(서울전역, 경기동부) 케이블TV취재

- 2010. 07. 14 정천석 소장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백석대 교수)이사로 모심
- 2010. 07. 16 최보희 선생님(광진구 보건소근무 /사회복지사 1급) 이사로 모심
- 2010. 07. 16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으로 올려짐
- 2010. 07. 19 정무성 교수님과 4차 토론회 논의
10월2일 '노인의 날' 을 맞이하여 노인문제를 주제로 선정
- 2010. 07. 29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이사로 모심
- 2010. 08. 04 주제발표 최재성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주제 : 고령화 시대 경제성장의 뒀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2010. 08.05~ 16 토론자 선정
- 2010. 08. 16 박재운 세무사 이사로 모심
- 2010. 08. 19 조순태 회장 (사)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이사로 모심
- 2010. 08. 23 차흥봉 前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대회장 고문으로 모심
- 2010. 08. 26 고문, 이사회 저녁 7시 광화문 뉴국제H'두메라'
- 2010. 09. 03 백세균 회장 (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이사로 모심
이현용 변호사 이사로 모심
- 2010. 10. 01 제 4차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실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뒀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10월 2일 '노인의 날' 을 맞이하여-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 론 자 : 나임순 교수 (백석대)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곽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2010. 10. 22 박연준 사무총장으로 모심
 2010. 11. 01 최석만 교수 (세종대학교) 이사로 모심
 2010. 11. 23 고문 및 이사회 뉴국제H '두메라'
 1)1주년 경과보고 2) 5차토론회 일시, 장소결정 3)사단법인 4)12월중 봉사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2010. 11. 29 레인보우 다문화예술단 창단공연 후원
 2010. 12. 01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주제자로 선정
 2010. 12 .02 나임순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0. 12. 17~20 제5차 토론회 선정
 2010. 12. 16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주최/『경기도다문화가족노래자랑』 경연대회 협력
 2010. 12. 25 성남 '안나의집'노숙자 배식 자원봉사
 2010. 12. 31 고문 및 이사 송년회

2011

2011. 1. 6 뉴데일리 추천사이트 링크
 2011. 1. 26 강태영 엔터랩 대표이사 홍보·기획이사로 모심
 2011. 1. 29 『국민희망포럼 한방의료봉사단』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공동으로
 성남 '안나의집' 노숙자 한방치료봉사

2011. 2. 17 제 5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 와 향후과제'

-2011년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을 시작하며-

주제발표자: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2011. 2. 18 제 5차 토론회 관련 연합뉴스를 비롯 10개 언론사 기사게재.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2011. 2. 25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전국시군구 보육정보센터협의회 회장)이사로 모심

2011. 3. 9. 19시 고문 &이사회 /광화문 뉴국제H '두메라 '
 --6차 토론회 날짜 (6. 14) 와 토론주제 정함

2011. 3.23 김용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제발표자로 정함

2011. 4. 4~8 6차 토론자선정

2011. 4. 22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1. 4. 25 김신근 변호사 이사로 모심

2011. 4. 28 진석범교수 (동서울대학 실버복지학과) 이사로 모심

2011. 4. 30 운영위원(10분): 김성택 (주차시설협이사), 서호석(국립중앙의료 한방내과 과장),
 박경희(수필가), 성은제(교육학 박사/명지대 청소년 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이자형 경제학 박사(경남대), 어지영 (회사원), 엄혜진(사업),
 조금산 (도서관 근무), 윤희한(지역아동센터장)

2011. 5. 2 19시 고문 &이사회 (운영위원포함) /광화문 뉴국제H '두메라 '
 2011. 5 .16 한국경제신문 후원 명기승인

2011. 5. 30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 영 (사업가) 이사로 모심

2011. 6. 9 삼성생명 광고후원 결정

2011. 6.14 제 6차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 론 자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용민 님(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토론회 풀영상 취재 및 7개 언론 기사기재

2011. 6.24~25 고문&이사& 운영위원 워크샵 속초설악컨벤션호텔

2011. 7. 19 19시 고문& 이사회(운영위원) 광화문뉴국제H '두메라'

2011. 8.27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주제발표자로 선정
 '한국 복지 | 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정함

2011. 9. 10 '안나의집' 봉사

2011. 9. 11 '주사랑공동체' 봉사

2011. 9. 27 제7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국 복지 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 론 자 :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심윤종 전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사회: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사회: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2011. 10. 14 고문&이사회(운영위원 포함) 광화문 뉴국제H '두메라'

2011. 10. 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2011. 10. 23 제8차 토론회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자로 선정

2011. 11. 10 고문 &이사회 (운영위원 포함) 서울 광화문 '산래향'

2011. 12. 20 본 연구회 창립 2주년 겸한 제 8차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 '

-나눔 주제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1)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2)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3) 곽대석 CJ 나눔&문화 재단 사무국장

4)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5)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나눔공동체

축 사 : 차흥봉 한국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한국여성농구연맹 총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축 가 : 이 윤 순 소프라노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뮤지컬 <갯츠>

후 원 : IBK기업은행, CTS기독교 TV, 보건복지부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11. 12. 24 '안나의 집' 봉사 (예정)

2011. 12. 31 '주사랑공동체 봉사 (예정)

<부 록 2>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관련 언론 기사

『제5차 토론회 보도자료』

-저출산 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1013> '뉴데일리' 5시20분

“저출산 문제, 삶의 질까지 떨어트릴 것” 17일 ‘저출산-고령화 대책변화’ 토론회 열려
“인구학적 문제 아닌, 국가 존폐 위기 온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극복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 모두가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 움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를 맞아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진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출산율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출산율은 1.48에서 2005년 1.08로 줄었다. 이후 2006년에는 1.12, 2007년은 1.25로 소폭 상승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온 지난 2008년부터는 다시 1.19로 감소, 지난 2009은 1.15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실장)는 제 1차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출산을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저출산 대책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제2차 대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주관으로 저출산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극복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은 돌봄 노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온 바 있다.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5673 '나눔뉴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저출산 대책" 강조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책 변화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조장훈수석기자

‘저출산 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주관,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후원으로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양육에 대한 부담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젊은 부부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저출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 됐다.

우리 사회의 평균 출산율은 09년 현재 1.15명으로, 08년 현재 1.71명인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와 소비 위축, 재정지출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부양부담이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기도 하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관주도의 정책대안을 넘어서 국민참여적인 복지실현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2009년 10월 단체를 설립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해 축사를 한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은 "출산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인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며,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인식전환이 어느때보다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정숙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복지형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보조에 집중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률 확대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금년이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강화,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의 중산층 이상 확대"등으로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토론자들은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가능케 할 '양육협조'라면서,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남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변화'와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경영개선'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가 요구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와 이정숙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17086 '성남투데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저출산 문제 고민한다

17일 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2/16 [10:02]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17일 오후2시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주제발표자는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인 이삼식 박사가 실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정영훈 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이 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들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책마련과 세계 최저 출산율로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홈페이지(www.sswkorea.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5/2011011500018.html '조선일보'(플라자)

chosun.com

[플라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외기사100자평(0) 입력 : 2011.01.15 00:07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 변화의 합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7/02000000000AKR20110217135700004.HTML?did=1179m>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회구조 개선 위한 저출산 대책 필요"

"고대 영국인, 인육 먹고 해골잔 사용"앤디 워홀 자화상, 194억원에 팔려초보 운전자가 가장 괴로울 때는?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짝퉁 명품 구입 손가락 12개, 발가락 14개인 미얀마 아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17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

화의 합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 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숙 전(前)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했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정영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8905&kind=menu_code&keys=3 '데일리안'



“저출산 대책, 양육비 지원보다 사회구조 개선” 선진사회복지연구원 토론회서 “일과 가정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 변윤재 기자 (2011.02.17 21:55:42)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나 양육비 지원 등의 소극적 대책보다 사회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17일 선진사회복지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합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강화되고 출산율이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1명보다 낮은 1.15명의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양·질 저하,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등 저출산에 따른 현상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번 토론회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취업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사회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1차 저출산 계획이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상도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해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2차 계획은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1차 계획과 달리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

이 실장은 “정책 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선)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1/02/21/65289.html>

'프론티어 타임즈'



선진사회복지연구, '저출산 대책 토론회' 성료

저출산-고령화 2차 기본계획 시행 앞서 열띤 토론

저출산-고령화가 중장기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1일 사회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관, 보건복지부-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롯데백화점 후원으로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화의 합의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올해는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된다”며 “1차 기간(2006년-2010년)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다 OECD 평균출산율 1.71(2008년)보다 낮은 1.15명(2009년)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5년간 19조9,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선 결혼-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고무적 성과”였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2차 계획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대상범위를 맞벌이부부, 중산층에 확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GDP대비 관련예산이 0.4%수준으로 OECD 평균 2.3%에 못미치고 있어 국가가 예산을 늘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발제를 통해 비용지원 등 저출산 대책의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나 사회구조적인 시스템 및 체질개선에 역점을 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금 대체수준 향상, 인력 대체수준 향상,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엔 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과 남서울대 도미향 교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 미래기획위 정영훈 과장이 패널로 나와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선 오

영숙 전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이 나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송현섭 기자

NEW DAILY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0897> '뉴데일리'
오후 3시25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저출산 토론회 개최
오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되는 해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1차 저출산 기본계획 기간('06~' 10)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평균 출산율('08) 1.71보다 낮은 1.15명('09)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면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aid=0003695529> '뉴시스' <오늘의 주요행사>

oid=

▲오후 2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6차 토론회』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MBCNEW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은 14일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비용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동일한 근거에서 최근의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선화seminar@mbc.co.kr / 20110615

데일리안
YOU IS THE NEWS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관리 정책 시급”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토론회

변윤재 기자 (2011.06.14 21:11:17)

6.25 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2010년 기준으로 732.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생산가능인구의 18.0%,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점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다.

그러나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조기퇴직과 구조조정 대상이 돼야 했던 서글픈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퇴직과 노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이들은 경제적 활동이 불가피하다. 자녀들이 대부분 미혼이거나 미취업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었지만 연령상 각종 연금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이른 관계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고령화와는 다른 관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정책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이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조정 등 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대비해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를 지연시키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그는 △임금피크제 및 계속고용제 도입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의 현실화 △사회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 △전문성 있는 취업알선 등을 제시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으로 전이시키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미국, 일본은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가 운영되지만, 한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단기적이거나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 있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동·고용 등 고령자 정책기구의 일원화, 직업훈련의 질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며 “2050년대 이후의 인구부양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구조조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출증가 억제 대책 등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최용민씨는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며 “우리 세대가 바라는 것은 건강하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부분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면서 정보에서 뒤처지고, 전문적 재취업과창업의 길을 걷기에 늦어짐에 따라 주변의 눈치와 스스로의 절망감 속에서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은 호경기일 때, 그리고 일부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요대안으로 볼 수 없다”며 “국내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상호연결해주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건강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82407>

뉴데일리 NEWDAILY

“쏟아지는 베이비부머, 해결책은 일자리”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정책적 보안책 논의/박모금 기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이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문제가 붙어진 것은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되면서다. 이들 세대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기에 사회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다.

회사 밖으로 쏠아져 나오는 이들은 일명 ‘샌드위치 세대’ 라고 불린다. 동시에 아파트세대, 기러기 가족세대, 격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OECD국가 중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 그리고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온 세대이기도 하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는 노년층의 일자리와 소득, 건강 등의 내실화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정책대상을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고령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세대에게 필요한 일자리 측면이 논의됐다.

김 연구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설명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정년 연장을 통해 은퇴를 지연시켜야한다는 것. 60세 정년의무화를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그 예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시장 수요를 유발하는 것이다.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대안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전이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따로 있다.

당장 은퇴하는 이들이 쏠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노인계층으로 전환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고용 및 소득이 하락하면서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시민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주위 친구들이 직장을 나와 할 일이 없다”며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력을 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게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 · 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3/2011061300033.html 조선일보 플조선
일보 플라자



* www.youtube.com/watch?v=FJRyl5vfAcs&feature=player_embedded 성남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920682> | 뉴시스 | 기사입력 2011-06-21 08:57 |

은퇴 시작 베이비부머 세대 어찌할꼬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를 정부는 대략 732만6000명으로 보고 있다. 한국 최대의 인구집단이다.

원래 베이비붐 세대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비롯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코호트’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연령집단을 의미함)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기간의 합계출산율은 3.0%로 미국 총인구의 30%인 7700만 명에 달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국제 공통의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團塊)세대’ 라고 한다. 종전 후인 1947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며, 이 기간 출생자 수는 806만 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했다. 이 기간의 합계출산율은 4.0% 이상으로 일본에선 메이지유신 이후 가장 높은 출생률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미국과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빠르게 시작됐지만 한국은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로 규정해왔다.

베이비붐세대가 현직에서 정년퇴직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이들 베이비부머들에 대해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이 은퇴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막 혼인기에 접어든 때이다. 재취업은 쉽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10년은 더 기다려하는데 연금과 의료보험료, 기본생활비, 자녀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등 지출은 계속 늘어나야하는 상황이다.

이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본인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엄청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관련 토론회 열어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베이비부머들의 현황과 미래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6번째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된 ‘베이비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삼성생명은퇴연구소 우재룡 소장,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베이비부머세대 토론참가자 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최용민씨,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총괄 이기영 단장 등 4명이 패널로 나와 김 원장과 토론을 벌이

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규정한 베이비붐 세대의 외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독특한 주장을 했다. 김 원장은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제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규정했다. 이 시기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빈곤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출생아수가 매년 80만 명을 넘었다. 기존의 베이비부머와 1968~74년생 코호트까지 합치면 베이비붐 세대는 총 인구의 34%인 1650만 명이나 되는 거대 인구집단이 된다. 반면 1975~76년생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이었으나, 출생아수가 감소 추세를 보여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제외했다.

김 원장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1·2차 베이비붐세대는 전국 토지의 42%, 건물의 58%,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주도세력이다.

한편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고용률이 74.1%, 실업률은 3.3%, 비경제활동인구는 22.4%였다. 이들 세대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이 91.8%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연금 소득 11.3%, 사회보장소득 10.4%, 푸드 스탬프(배급표) 6.9%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소비는 더 하고 저축은 덜 하는 편이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풍부한 금융·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까지 더해져 소비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 총 732만6000명 중에서 취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5.5%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주로 임금근로자(약 41.2%),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945~54년생은 비임금근로자, 특히 자영업자(31.4%+8.8%)가 많았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46~59세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근거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 부양하고 자녀 지원해야 하는 이중부담 안아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된 지원의 내용이다. 또 이들은 부모 부양보다는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부부갈등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해 10년 후엔 부부관계 유지가 상당히 회의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중요한 갈등 요인은 경제문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등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이

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베이비부머의 (황혼이혼 등) 노년기에 심각한 부부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가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생산인구가 2996만 명에서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536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50년에 1616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다가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 명선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2070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인 25~64세 인구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베이비 붐 세대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 혜택은 제대로 누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해 이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복지예산 부담도 증대된다고 예상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지역의료 100% 부담은 무리… “정부가 지원하라”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연0.5%p 상승하지만 2020~40년 간에는 0.8%p 이상씩 상승해 재정부담이 급증한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5%지만,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해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며, 이들이 대부분 노인계층으로 편입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패널들은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 지역 연금 및 의료보험을 100% 부담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감당이 어렵다. 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 ▲여성 베이비부머들이 출산기에 있을 당시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불법 낙태를 강요받다시피 했는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줘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면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수입은 없고, 지역연금과 의료보험을 1인당 40만~50만원을 내야하는 게 일반적이다. 더구나 대학생 자녀 교육비와 혼례 비용 부담 등으로 거의 유일한 자산인 집을 처분해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부대책은 없는가 등을 물었다.

leeds@newsis.com

『7차 토론회』

‘한국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62309&kind=menu_code&keys=데일리안



보편적 복지? 복지재정 확보는 어쩔건데?

김소정 기자 (2011.09.30 15:53:1)

지금 정치권에서 복지정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극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올 초부터 정부의 복지에산은 증가했지만 서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대표 이정숙)은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담세율 인상과 관련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과 근로빈곤”이라며 “이런 우선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도 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인 건강보험의 경우 20년 전인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달성한 이래 보험료 인상이 매우 어려워 적자를 보고 있으며, 보장율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연구본부장은 “북유럽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전한 것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북구 국가처럼 강건한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복지정책만으로 빈곤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홍백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지속가능성은 현재의 재정 규모의 틀 안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일례로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문제는 사회보험의 틀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홍 교수는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과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부족은 다양한 형태의 조세를 통해 충당하고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신자유주의적 근로연계형 복지가 아니라 시민권적 개념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복지 논쟁에서는 복지의 확대만 주장하고 재정적 확충 방안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을 늘린다면 다른 분야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풍선 효과’ 와도 같은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자원 확충을 세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면서 “어떤 분야를 먼저 시행할 지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민간의 공동투자 및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경영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우수 성공 사례는 널리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고 말했다.

즉, 복지 분야에도 시장원리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복지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리더십과 경영자들의 경영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경영평가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도 차등을 두는 인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재정의 국고보조금 중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9581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부담분도 증가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간다는 우려가 크다” 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나 생활자들이 최상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박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문제는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로 환원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고, 재정도 국고로 환수 조치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여성신문

조혜영 / 여성신문 기자(hyrmitt@womennews.co.kr)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 복지 우선대상으로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층, 특히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을 복지의 우선순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연구본부장 고영선 박사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며 “역사적 특성에 기인한 북유럽 국가의 성과를 따라한다면 결국 저소득층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이 문제에 대해 박 총장은 “중앙·지방 정부 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는 복지문제를 현행의 재정 규모의 틀 안에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라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교수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근로시간의 단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시민권적 개념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153호 [사회] (2011-09-30)

http://www.news1.com/article/view.htm?clD=article&ar_id=NISX20110927_0009322292

“중산층까지 복지대상 넓히면 복지국가 지속 불가능해질수도…”

기사등록 일시 [2011-09-27 15:27:26] 최종수정 일시 [2011-09-27 18:13:02]



서울=뉴스1】홍세희 기자 =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27일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유럽 등 복지강국과 같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중산층까지 복지제도의 대상을 넓히게 되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정책 설계에 있어 예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노인빈곤과 근로빈곤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부 학자들은 보편적 복지를 확산하거나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혜택 증가에 복지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중산층에게 복지혜택을 주게 되면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복지제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의하면 스웨덴 등 국가들도 보편적 복지를 통해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했다"며 "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잔여적 복지에 치중한

나라의 경우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해 저소득층이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선뜻 동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인 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보장률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중산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보편적 복지제도가 발전한 것은 역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들 국가처럼 경제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으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홍백의 서울대 교수,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 정상수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hong1987@newsis.com



http://v.daum.net/link/21543794?&CT=MY_RECENT 성남일보

"한국 복지재정의 현주소 진단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 토론회



한국의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해 돌아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2011/06/12 20:21 입력



한국전쟁 이후 1955~19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태어난 세대를 흔히 1차베이비부머(baby-boomer) 세대라고 지칭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란 합계 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cohort)를 말한다. 즉, 한 부부가 3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던 시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1968~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와 베이비부머 예코세대(베이비부머의 2세)까지 합하면 1,6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다.

아파트세대, 사오정세대, 기러기가족세대로 대변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0년 현재 733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생산가능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취업자는 553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점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부양과 동시에 자녀를 책임져야하기에 ‘깁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기도 한다. 또 아파트세대, 기러기가족세대로 칭해지거나 격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OECD국가 중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세대, 벡타이부대, 마이카 세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온 세대, 조기퇴직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사오정 세대이기도 하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여성상위세대라는 말도 얻은 세대다. 이러한 많은 수식어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생역정을 다각도로 대변해 주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며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이다. 이제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인구구조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령대라 아니할 수 없다.

신빈곤층으로 전락될 위기의 세대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자며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자녀 양육·교육비로 사용해야 하고 부모를 부양해야 하기에 진작 이들은 퇴직과 노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은퇴가 시작됐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자녀들은 아직 학업중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고 창업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커 쉽게 시작할 수 없는데다 각종 연금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심리적 이중고에 시달리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위기의 세대이다.

최근 한 연구소 조사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은퇴 희망시점을 64.8세로 제시했지만, 실제로 은퇴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점은 평균 62.3세라 한다. 또 월평균 가계소득이 약 386만 원이었지만,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평균 211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실제로 저축하는 것은 월 17만 원에 불과해 은퇴 이후를 위한 대비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은퇴 후 삶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가족관계나 친구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상당수가 응답했고 은퇴 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와 “노후에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해야하는지”,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마땅한 일자리가 있을 것인지” 등이다.

쓰나미처럼 노년층으로 인구 대이동

다행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 취약하지 않다. 그러

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의 중심인구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소비의 중심인구인 노년층으로 쓰나미처럼 대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이들의 은퇴는 산업현장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노동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 및 사회 복지비용의 확대를 가져 온다.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조사 분석’에 의하면 근로자 정년이 55~58세인 사업체 비중이 83%인데 이들이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세대의 인구규모가 현저하게 작아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치닫게 돼 노령관련 복지 수요와 욕구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들에 대한 인적 자원관리 및 직업능력개발 등 교육을 통해 실버산업, 고령친화산업 등에 활발히 진출하게 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대가 아닌 신산업동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연금사각지대의 보완과 재정 건전화와 과제

경제성장에 따른 진통을 경험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린 이들 세대에 대한 정책과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지금부터 해 두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60세에 진입하는 2015년부터는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해 연금 재정의 불안정성, 연금사각지대의 보완요구 등이 더욱 무거운 과제로 제기될 전망이다.

복지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에서 최소한 규정된 평균 57세 정년까지라도 안정되게 일 할 수 있게 하고 퇴직 후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가령 사회적기업, 사회공헌 일자리, 귀농, 귀촌 등을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를 위해 환원될 것이다.

끝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당사자들도 정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재정과 형편에 맞게 노후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정보를 적극 활용해 부단한 자기개발에 힘써야 한다.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

—

이정숙(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대중가요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있듯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여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남의 일 같지 않게 애대우며 함께 그 짐을 나누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인간’ 이야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 남을 위해 헌신, 희생했던 마더테레사 수녀님이나 故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들은 현실적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누추해도, 그 삶 자체가 정말 광채가 났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평생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다가 선종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남긴 말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였다. 이념과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연말--

연말이다. 연말이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살펴보게 된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3살 이상 인구 가운데 36.4%가 기부에 참여한 바 있으며 19.8%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기부하는 이유 43.3%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라고 답변했고 기업이나 법인의 기부보다는 개인의 기부가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민동참의식 먼저 선진국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산업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개인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더라도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남의 불행과 아픔이 결국 사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와 '나'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만이 '나'도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옛날부터 품앗이를 통해 서로 상부상조하였고 사돈의 팔촌까지도 챙기는 끈끈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다. 精과 興이 많은 국민이라는 것을 지난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유감없이 세계에 입증했다. 돌반지, 결혼반지, 환갑반지 등 정말 쉽게 동참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금붙이였지만, 나라가 어렵고 내 이웃이 살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기꺼이 다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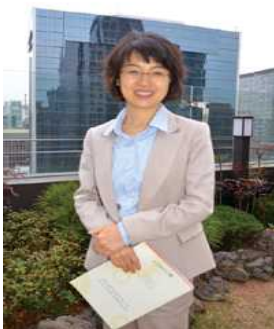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2011년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의 디폴트 위기가 다시 고조돼 우리나라 경제도 심상치가 않다, 고용불안으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서민물가는 올라가고 있어 살기가 점점 더 어렵고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때일수록 사회지도층이나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에 앞장서 주길 기대해 본다.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엔 빨간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해 종소리를 울리고 있고, TV 화면 위 한 모퉁이는 ARS 불우이웃돕기모금 전화번호가 차지하고 있다.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작은 성의일지라도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 ARS 모금 1천 원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부분이 소시민들인 것을 보면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속담을 실감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실천은 이 시간에도 형편이 어려워 힘들고 고달픈 이웃들에게는 너무나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 작고 희미한 촛불이지만, 주위의 어둠을 밝혀 주듯이 나의 작은 행위가 작은 촛불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광화문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계'가 매일매일 올라가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게 이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랑의 온도계'에 적힌 "나눔!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라는 슬로건을 잊지 말고 2012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자.

“복지는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선진복지국가를 만듭니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진정한 복지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라고 단언했다. 시민의 참여 없이는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 게 이정숙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정치권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걱정’이라는 단어로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그는 “당리당락에 따라 또는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에 국민들은 신물이 나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충언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설립 취지

선진국 진입에 필수불가결한 복지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 예산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한정된 재정으로 다 충족할 수가 없어 이를 지속가능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보, 보수, 좌, 우 이념을 초월하고 여, 야 정파를 떠나 또 복지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구회 구성원이 돼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되고 대안 모색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브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선진사회복지란

국민들의 물질적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를 평등, 공정하게 주어져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신적인 행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려는 의식을 가진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2012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를 차지하는 92조원이 복지예산입니다.

2000~2007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증가율은 약 2.3배 높아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07년도 복지지출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복지예산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조세 전후 상대빈곤의

국가비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세이전과 이후의 간격이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관련 부처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인력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무척 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복지논쟁이 치열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진지하게 말하면 그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를 떠나서 정말로 국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복지를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정략적으로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복지다’ 라고 이분법으로 나누었는데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별이고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요, 복지사업에 따라 보편적으로 모두 수혜대상이 된 것도 있고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수혜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복지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선심부터 쓸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미래는 어떻게 되든 미래는 미래고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여, 야 없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복지를 남발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서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견제와 조정과 대변기능자로서 내년에 복지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끝도 없다고 봅니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습니다. 이 비결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정치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그만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미래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다른나라의 어머니들보다 더 자식과 가족을 위해 그야말로 희생, 헌신하지 않습니까?

최근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은 정치논쟁에 신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국민들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해 주고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는 반증입니다. 복지도 마찬가지로 내 가족 일 같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보다 진정성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연말이다. 국민성금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계와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연말이면 각 방송사에서 사랑의 모금 운동과 거리에 구세군 자선냄비를 통한 모금이 시작됩니다. 정말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단 돈 1000원이라도 내게 됩니다. 우리가 1000원 정도는 부담

없이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지만 작은 관심과 사랑, 사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모금에 등한시한다고 봅니다.

우선 정부나 관련단체는 투명성과 도덕성, 신뢰성,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정이 많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원이 모여 1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되고 1억원이 됩니다.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단 돈 1000원이라도 꼭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자원봉사를 가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는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모금이나 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사회는 다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면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베풀고 양보하겠다는 생각과 사회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해서 앞장 서 준다면 모두 다 잘 사는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메시지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꿈과 희망을 잃는 순간 주위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패배의식에 젖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차 도움의 손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부탁드립니다.

연구회 앞으로 계획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한 토론회는 분기별로 지금처럼 계속해 같이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복지 각 분야별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재정적 여건으로 위원회별 활동이 여의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 조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김인수기자 사진/문혜원기자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2011.6.15)토론회를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시고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임원진 일동